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2.

고용노동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항목은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이행하는지를 단계적(계획 → 집행 → 성과 → 환류)으로 관리하도록 구성

○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도와 효과성에 배점을 많이 부여 (60%)

구분	계획	집행	성과	환류
평가 내용	▲ 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치의 도전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 추진계획 일정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준수율 등	▲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 및 대외 만족도 등	▲ 의견수렴 충실성 ※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등 ▲ 평가결과 환류 및 환류 노력의 정도 등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직업훈련·산업안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평가위원은 오직 국민적 시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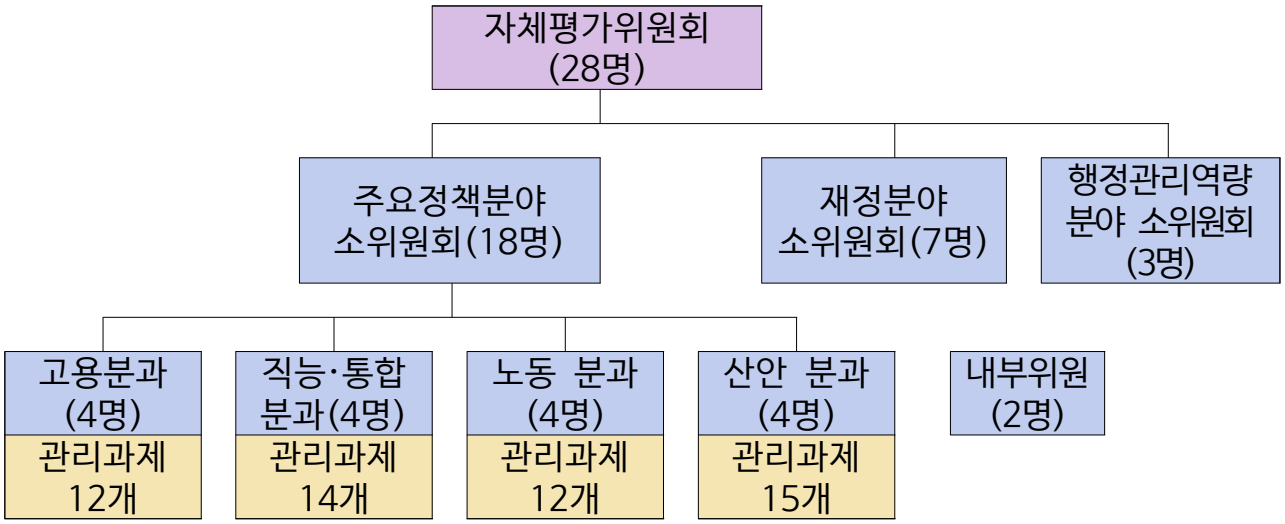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와 평가지원팀을 구성해 평가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 3개 소위원회(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분야) 27명* 및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으로 구성

* (주요정책) 고용분과, ·노동분과 ·직능·통합분과, 산안분과 등 4개 분과 총 16명
(재정사업) 1개 분과 총 7명, (행정관리역량) 1개 분과 총 3명



□ **평가방법**

○ **상반기 점검(중간평가)**

- **(점검대상)**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 **(점검내용)**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점검절차)** 자체점검 실시 → 총괄지원팀이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록

○ **하반기 평가(최종평가)**

- **(자료작성 및 자가채점)** 과제 소관부서에서 평가항목 중심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 측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전 자가채점 실시

- **(심사)** 정책추진환경, 난이도 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토록 분과위원에게 별도 설명 진행, 실적보고서와 설명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 **(점수 산정)** 분과별 소속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표준점수를 반영한 결과로 점수 산정(위원별별 표준편차 반영)

- **(이의신청)**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공개*하여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거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 결정

* 원점수 평균, 평가지표별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공개

- **(평가결과 확정)** 최종적으로 정책환경,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등급)** 53개 관리과제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7개 등급)

- **(평가결과의 공개)** 자체평가 결과 상세본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53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지표

< 평가지표 구성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성과지표의 적절성 (15점, +3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7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	8
		(가점) 지표 난이도	+3
	과제 중요도 (5점)	국정과제, 사회적가치 등을 고려한 과제 중요도	5
집행	계획이행의 충실성 (10점)	추진일정 적절성	5
		추진일정 준수율	5
성과	목표달성도 (30점)	목표치 달성률	20
		목표달성 노력 정도	10
	정책의 효과성 (30점)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20
		성과에 대한 언론, 국회, 국민만족도 등 외부 평가	10
환류	정책수립·집행의 반응성 (10점)	의견 수렴의 적정성 및 정책반영 여부	10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주요정책은 총 62개 과(팀) 중 48개 과(팀)의 업무에 해당하는 53개 관리과제를 발굴·평가

○ 1등급 2개(3.8%), 2등급 11개(20.8%), 3등급 10개(18.9%), 4등급 16개(30.2%), 5등급 미흡 6개(11.3%), 6등급 5개(9.4%), 7등급 3개(5.7%)

□ 총 53개 관리과제의 9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확인 결과, 목표의 평균 달성율은 98% 수준으로,

○ 87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12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일부를 달성하지 못함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8%	98%	98%
총 성과지표 개수	117	109	99
총 성과관리 과제 수	63	54	53

- 성과 목표 미달성 이유는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안, 노동시장 불확실성, 국회상황 등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 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중소기업퇴직 연금 가입 사업장 수	17,987	9,542	53%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특성상 퇴직급여 적립 여력이 낮아 제도 가입 유인 저조
중소기업퇴직 연금 가입자 수	86,338	43,834	51%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특성상 퇴직급여 적립 여력이 낮아 제도 가입 유인 저조
노조법상 쟁의행위 설명자료 마련	설명자료 마련	설명자료 검토	정성 평가	노동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검증 필요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 정확성 제고	통계 정확성 제고	96.5	정성 평가	행정관청 교육·모니터링 및 노조 대상 제출 지도 등 적극 관리에도 노조활동이 중단되어 제출하지 못한 휴면노조가 일부 있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인원(명)	106,000	19,042	91%	청년 채용 후 3개월까지 참여 신청 가능, '25.3월말 최종 집계 시 목표 달성 가능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 인원	20,800	19,704	95%	운영기관 미설치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 훈련 공급 지연 * '24년 하반기 신규 운영기관 (전북, 세종) 추가 선정
하이테크 과정 양성률	84.40%	82.27%	97%	2년 연속 훈련규모 역대 최대 확대에 따른 훈련생 관리 난도 상승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수	80	73	91%	연중 사업개편방안 마련·적용으로 신규기관 선정 지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150	87	58%	'24년 신규사업으로 협단체의 직접채용 및 매칭비용 부담 등 어려움으로 참여실적 저조
직업병 취약 사업장 컨설팅	4,000	3,945	99%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 평가점검에 다수의 인력이 소요되어 보건사업 물량 조정
산재보상보험 제도개선	개선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중	정성 평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업무상질병 신속 처리	18,500	18,307	99%	업무상 질병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 등의 한계

(2) 주요성과

□ 국정과제인 AI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고용센터(고용24) 구현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전설계와 예산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24년~)되는 등 정상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에도 집중

○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 개인·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안내, 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추천, 다른 전산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 서비스 시행('24.9월)

○ (서비스 확대) 디지털 이력서 등 구인·구직자 편의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확대 노력('24.12월~)

○ (공공데이터 추가 제공)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기존 개방 고용행정 통계의 접근성을 높였고, 추가 표본데이터도 민간에 개방('24.6월~)

□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엄단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로 노동약자 보호
: 본부-지방관서 간 수시 간담회·워크숍·전략회의 등 꾸준한 협업('24년 수시)을 통해 정책의 현장집행률을 높였고, 국민의 청원으로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한 것이 정책 달성에 주효

○ (악의적 임금체불 엄단) 재산 은닉 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

※ (전년 대비 증가율, 12월 기준) ▲강제수사 28.8%, ▲기소 48.4%

○ (체불임금 청산) 경기불안 등 임금체불 증가 추세임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지도 등으로 지도해결률과 청산액 증가

※ (전년 대비 증가율, 12월 기준) ▲체불임금 청산액 18.3%

○ (노동법 준수 인식 제고) 노동행정 통계 등 다양한 자료 분석·재감독 등을 통해 법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타겟 감독으로 법 위반사항 적발·개선조치 증가('24.11월 91.4%)

(3) 개선·보완사항

□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추진한 공동안전관리자 정책 성과(목표달성) 미진

○ (성과) 신규 추진 사업임에도 산업공단, 지역 경영자협회 등 87개 협·단체에서 총 360여 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지원하는 등 현장의 필요·효과성은 충분히 확인

○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월)에 따라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성은 충분

- '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인지도 부족,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공동안전관리자의 직접채용·자부담 등은 영세 사업장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대중소기업의 상생형 新 공동훈련모델을 개발·성공적으로 추진, 다만 재직자 중심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성과(목표 달성) 미진

○ (성과) 대기업의 우수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 선정·제공(100개)을 통해 대중소 훈련 격차 완화에 기여

○ (보완) 디지털·저탄소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마련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고(91.3% 달성)

-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이 형식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내실화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노동약자 이해 대변 강화 및 원하청 상생 확산	2등급
공정임금 확산 지원 및 생태계 조성	4등급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	2등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5등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4등급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 보호	1등급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조건 보호	2등급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4등급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운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6등급
노사합의와 근로자 참여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5등급
노사 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2등급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 구축	5등급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3등급
지역・산업별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4등급
일자리정책 효율성 제고	4등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강화	3등급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4등급
구직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6등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2등급
고용센터 취업 및 채용지원 기능 강화	3등급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1등급
고용노동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6등급
조사통계의 정책 대응성 강화	5등급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확산 노력	4등급
청년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의 성장 지원	4등급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2등급
공정채용 확산	4등급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2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육아 양립 지원 강화	2등급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4등급
고용저조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4등급
사회적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7등급
첨단산업·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K-Digital Training확대	3등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훈련지원	4등급
훈련 취약계층 대상 공공훈련 활성화	6등급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3등급
직무능력 중심 사회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4등급
공동훈련 활성화	7등급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2등급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감축 지원	4등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강화	7등급
위험성평가 점검 등 산재예방 활동 강화	3등급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2등급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3등급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3등급
위험공정 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 확보	2등급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3등급
직업병 예방·대응 체계 강화	3등급
직업병 취약 사업장 지원 강화	5등급
신속·공정 보상과 직업복귀 제고	4등급
안전의식·문화 확산	4등급
지역 자생적 안전활동 촉진	5등급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원 강화	6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노동약자 이해 대변 강화 및 원·하청 상생 확산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노동약자 이해대변 및 원하청 상생 확산**

- **(일터 개선)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운영** → 플랫폼종사자 권익 향상

▪ '24년도 **29개 지자체** 및 **8개 플랫폼 기업**에 **16억원 지급, 쉼터 설치·운영, 안전 장비 지급,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복지사각지대 축소)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신설·운영** → **2차 이상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사각지대 축소

*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기금은 1차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에만 사용 可

▪ **'24년 5개 대기업이 참여하여 총 116억원의 재원 마련**, 공동 화장실 설치, 명절선물 지원 등 복지사업 수행

- **(표준계약서)** 마트배송 직종을 위한 **표준계약서(안) 마련** → 노무제공자의 **공정 계약 관행 형성 추진**

○ **노동약자 보호 체계 구축**

- **(법제화)** 영세사업장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분쟁조정 지원, 미수금 예방, 표준계약서 확산, 공제회 활성화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 법률의 신속한 제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고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함
4. 정책 환류	양호	장관 현장 방문을 연간 총 6차례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이용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긍정적

2 공정임금 확산 지원 및 생태계 조성 —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선)**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24년)

- 직무분석, 평가, 보상체계 등 **전반을 진단·개선**하는 **컨설팅**을 **3개 업종***(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64개소에** 지원(835개소 신청)

  * 직무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생모델(원하청이 자율격차해소 추진)에 참여 중인 업종

- **전문가**는 컨설팅 **취지에 대해 높이 평가**, 컨설팅 **참여기업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만족도 높음**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업도 활용 가능한 **표준임금모델 개발 + 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프라 조성

○ **(우수사례)** 임금 이슈·쟁점 등 해결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 **(공감대 형성)**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국회, 노사단체 설문조사 결과)

- 공정 임금 **홍보영상 KTV 국민영상제 우수상 수상**(12.6)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 임금체계는 **장기간 형성되어 온 제도**이며 **노사 이견도 커,** 단기간에 획기적 성과 도출은 한계, 향후 **지속적 노력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임금체계 개편 사업을 신설하고, 연공급을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
4. 정책 환류	보통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컨설팅에 반영하고,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

3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적은 행정력 투입**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성형 AI** 24시간 대국민 노동법 상담* 및 근로감독관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 '24.11.11. 공개 후 1개월 간 국민 2,528명, 11,682회 사용
** 임금체불 등 진정서 접수 지원, 판례·질의회시·매뉴얼 자연어 검색 진술조서 분석·요약 등

○ **노동법 준수 생태계 구축:** 카카오 **알림톡**, 산업단지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등 활용

* ▲48개 지방관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7.5~, 6,000여 명 참여),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9,000여 명 참여),
▲HR 플랫폼社 업무협약을 통해 202개 기업, 1,461명 근로자에게 무료 서비스 지원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및 회계감사원 교육 →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 **현장 안착**

- '24년도 공시율 90.9%(공시 대상 733개 중 666개 공시)

○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조 운영비 불법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실시**

* ▲**부당노동행위:** '24.10~'25.1월 점검 완료(법 위반사항 검토 중)
▲**포괄임금**: '24.3~7월 60개소 완료(58개소에서 위법 268건 적발·시정),
'24.12~'25.2월 120개소 진행 중(체불임금 기획감독과 합동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 필요
(現 임금·퇴직금·실업급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였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AI 활용, 카카오 알림톡 등이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도 끌어낸 것을 우수하게 평가
4. 정책 환류	보통	내부목소리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반영에 노력하였음

4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시간 근로감독**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 총 **428개소 감독**,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42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

○ **근로시간제도 및 지원사업 홍보** →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도입·활용 촉진 및 법 준수 부담 완화

- **유튜버 협업 영상** 게시(1월), **제도 리플릿** 제작·배포(3월), **유연근로제 활용 등 모션그래픽 제작·송출(12월)** →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노사의 이해도 제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 **사회적 논의 진행**('24.6.21~) →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관한 사회적 대화**

-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6~12월, 10회 개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연·월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우수하나,

- 이해관계자 애로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노·사 합의를 통한 장시간 근로 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연근로제 도입률*이 높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안내 필요

* 도입률: 탄력근로(9.3%), 선택근로(6.5%), 간주근로(5.3%), 재량근로(1.9%)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24년 기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성과목표치 달성정도가 우수함 장시간 근로감독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4. 정책 환류	양호	사업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유연근로제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함

5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무시간 면제한도 논의 및 합의** 도출

○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안정적인 현장안착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총 397개 기관에 공문 발송 및 매뉴얼 배포

○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 개발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의결·고시된 만큼 제도의 현장안착 상황 모니터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목표치 달성정도가 우수함 공무원·교원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면제한도 논의 및 합의 도출 등 성과
4. 정책 환류	양호	제도의 운영 실태파악 등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등 노력이 우수함

6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 보호	1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지원**

- **(현장예방점검의 날) 점검 대상**(10인미만→30인미만) **및 물량 확대**(**'23년 1만→'24년 1.8만개소**)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지도·점검**('24.11월 13,899개소) 및 유관 협·단체 합동 캠페인 진행

- **(근로조건 자율개선) 20인 미만 신규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 **점검 및 컨설팅**(7,691개소)하여 **위반 사업장 개선율 96.8% 달성**

○ **반복·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역량 집중**

- **(엄정대응) '시정지시→범죄인지'로 사법처리 원칙화**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마련(4.22), **강제수사 강화** 등 체불사업장 엄정 대응

☞ **(성과)** 전년동기比 체불 **기소건수 51.6% 증가, 강제수사 22.% 증가**('24.10월)

- **(법 개정) 상습 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근거 마련**

- **(근로감독)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최초 실시('24.1~3, 6~10월)* 및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전국 동시 특별감독**(7개소),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23.12~'24.3)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감독 집중 실시

* (1·2차) 135개소 대상, 총 275억원 임금체불 적발 → 3차 착수 예정

☞ **(성과) 감독 물량 증가**(27,500→28,000개소)에도 불구 **법위반 적발률**(89.3→91.4%) 및 **위반사항 개선율**(95.9→96.8%) **제고**

- **(신속청산)** 체불액 증가했으나 적극적 청산 활동으로 **청산율은 증가**(81.7%), **명절 집중지도기간** 통해 **체불 위험 사업장 사전 점검**(4,562개소) 및 **대지급금 지급 기간 단축**(14→7일)으로 **2,457억원 청산**

▪ **태영건설 105개 현장 점검**('24.1~2월), **큐텐 대응반 운영**(8.19) 등 대규모 체불 우려 사업장 **선제적 관리로 신속 청산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경기적 요인**과 함께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여전히 증가세**

* 연도별 체불액(조원): ('20) 1.58 → ('21) 1.35 → ('22) 1.35 → ('23) 1.78 → ('24.10) 1.70(+16.9%)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성과목표치 달성정도가 우수함 상습 체불 근절법 개정 등 반복·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4. 정책 환류	보통	간담회,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함.

7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조건 보호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비정규직 차별감독) 비정규직 다수 고용** 등 **차별 발생 고위험 업종** 대상 **연중 기획감독** 실시('24.12월 기준 200개소)

* ❶(1~3월) 저축은행 등 35개소 ❷(2~6월)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 47개소 ❸(4~7월) 식품제조업 98개소 ❹(9월~) 익명차별신고센터 신고 사업장 20개소

- 불리한 처우를 우려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익명차별신고센터 운영**(7월) 및 **후속 감독** 실시

☞ **(성과) 비정규직 1,144명**(5.4억원 규모)에 대해 **차별 시정**

○ **(자율개선)** 민간의 **자율적 고용구조개선 및 차별해소 지원**

- **컨설팅**을 통한 **자율개선**(진단 → 개선방안 권고 → 권고이행) 및 차별예방 교육, 현장캠페인 등 **인식개선 추진**

* (컨설팅)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진단(353개소) 및 이행 권고(308개소)
▲고용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진단 및 이행 지원(88개소)
(인식개선) 고용상 차별 예방 상담(627회) 및 교육(13,628명) 등

- 사업장의 자율적 차별진단 및 개선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련 내용 홍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교육**** 등 실시

* ▲책자 배포(2만부, 경제6단체·노무사회 등) ▲동영상 송출(유튜브, 7월~)
** 9~10월 서울·부산 등 광역청에서 교육 실시, 280개 기관, 414명 대상

☞ **(성과)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23년 76.2% → '24년 77.9%), **비정규직 복지 적용률 증가** 등 **비정규직 근로여건 향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는 완화** 추세이나, 여전히 관행화된 연공급제로 **고용형태 간 구조적인 임금격차** 잔존

-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비정규직 감독,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8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사업장 감독과 교육, 컨설팅,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하여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 지원**

- **(청원감독)**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감독**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건 적발 → 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관련 시정지시 등

- (예방 및 근절 교육) 총 734개 사업장(50인 미만 396개 실시, '24.11월 기준) 대상 **교육 실시,** 최신 사례·판례 등을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 보급**

  * 사용자/근로자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게시('24.1월)

- **(컨설팅 지원) 조직진단,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 문화 개선지원 컨설팅' 실시** ('24년 354개소 完)

- **(인식개선 활동)** 직장 내 **상호존중의 문화 안착**을 위해 웹드라마·캠페인 영상·포스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인식개선 활동 **진행***

  * 유튜브·지하철·KTX·신문·TV에 웹드라마(10분), 영상(20초), 포스터 등 연중 홍보

☞ **(성과)** 소규모사업장 교육지원 **목표(410개소) 대비 103% 달성**(423개소, 연말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줄었다는 직장인 응답 60.6%(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24.6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피해 경험률 44.5%→32% 성과'(연합뉴스, '24.7월)

○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청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상담·권리구제 지원,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시 지속**

- **(기획감독)** IT, 플랫폼 업종 등 **청년 다수고용 업종 60개소 감독**

  * 괴롭힘·성희롱 등 283건 적발 → 범죄인지 2건, 시정지시 236건

- **(상담·권리구제)** 노동법률 전문가가 청소년·청년(~34세)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관련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교육)** 각급 학교의 교육신청을 받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 **(성과) 상담·권리구제 지원 목표 대비 약 120% 달성,**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 **이용자의 86%**가 **만족도 긍정*** 평가

  * (만족도 평가) ▲매우 그렇다: 67%, ▲그렇다: 19%, ▲보통: 10%,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간 **괴롭힘에 대한 인식차**가 있어,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의 어려움 등을 호소

○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언론 등에서 임금체불,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수 지적**

*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연합뉴스, '24.1월)
▲(생략) …,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원(한국일보, '24.10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성과목표치 달성정도가 우수함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안착, 청년·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건수 감소 등 우수 교육, 홍보, 컨설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4. 정책 환류	보통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토론회, 간담회,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고 반영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퇴직연금가입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사업장·가입자·적립금 각각 69.7%, 67.8%, 81.7% 증가**

* (사업장) 13,691 → 23,233개소, (가입자) 64,681 → 108,515명, (적립금) 4,734 → 8,601억원

○ 주요 언론에서 중소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 **긍정 평가 다수**

* '24.09.03. 파이낸셜뉴스 "기금형 중소퇴직연금 '푸른씨앗' 출범 2년 만에 12.8% 수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더 많은 영세사업장과 취약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타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 영세기업의 재정부담으로 가입 유인이 다소 떨어지는 등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가입유인을 지속 확대**하고,

* (사업주 측면) 수수료 지원, 재정지원 등 / (근로자 측면) 높은 수익률 홍보 등

- 현장설명회, 민간기업 MOU 확산, 집중 타겟 홍보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도입률 제고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못함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가입 사업장·가입자 증가 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등 정책성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통한 긍정적 성과가 있음
4. 정책 환류	보통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10	노사합의와 근로자 참여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정책적 수요 중심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추진**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로 양극화 해소

  * 50인미만 컨설팅 지원건수(비율): ('22) 521(35.6%) → ('23) 566(36.2%)→ ('24) 877(48.9%)

- 지방관서 추천 확대 및 **진단 컨설팅*** 유형 신설 등 **지원 다각화**를 통해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증가(54.9%)** ☞ ('23) 566개소 → ('24) 877개소

  * 사전에 중소 사업장의 문제점 파악 및 컨설팅 과제 도출, 적합 정부 지원사업 연계(114개소)를 위해 진단 컨설팅 신설·지원(160개소)

○ **지역·업종별 일터혁신 특화 모델** 발굴 및 전파

- 지역 및 업종별 **공통 이슈 해결**을 위해 16개 **컨소시엄**으로 묶어 특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업종별 대표 모델 마련(50개소)**

▪ **항공우주산업 및 조선업 중심** 원하청 컨소시엄 4개(16개소 참여), **자동차업종을 지역 노사민정과 연계**한 컨소시엄 3개(9개소 참여) 등

○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중심으로 통합 및 예산 확충**

- **부처 내 컨설팅**이 **여러 개로 분절**되어 **중복·비효율**이 발생 → 기업의 문제를 하나의 컨설팅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25년에는 **고용부 내 유사한 6개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으로 **신설·개편** 및 **예산도 확충**

* (’22) 257억 → (’23) 280억 → (’24) 298억 → (’25, 신설) 408억(정부안)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 내 다양한 컨설팅이 **칸막이로 작용, 통합적 문제 해결 어려움**

○ **근로자 참여 촉진** 및 **사업주 책임성 강화** 장치 부족으로 **수용성 있는 제도설계, 설계된 제도의 이행 촉진**에 한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지역·업종별 모델을 발굴하여 혁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등 일터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지원기업 수, 우수 사례, 수혜자 만족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
4. 정책 환류	매우우수	컨설팅 활동 내용 등을 전수 모니터링하여 내실있는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11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2등급

(1) 평가결과

○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 지원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 등 고려, 취약 사업장 268개소**를 선정, **전담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분규예방** 및 **신속한 해소 지원**

⇒ **'24년 근로손실일수**(1.1~11.30)는 **362천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38% 감소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가 과거 대비 안정화 추세**

* (11.30 기준) '14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587천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임단협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중심**으로 **교섭 지원** 및 **분규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갈등해결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양호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월 1회 이상 취약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나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낮은 추세가 지속
4. 정책 환류	양호	노사관계의 현안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12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 구축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동분쟁 해결·예방 지원**

- **(쟁의행위 설명자료)** 노사가 **노동조합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자료** 마련 추진

- **(ADR 활성화) 쟁의행위 등 분쟁발생 이전 조정·화해** 등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예방 지원**

▪ **노동委 사전·사후 조정 등 상시 조정서비스 제공, ADR 전문가 양성, ADR 법령정비 검토** 등 추진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버스·병원 등)**의 분쟁 조기 종결** 및 **노동委 조정성립률 증가***

* '23년 43.3% → '24년 52.1%(전년 대비 8.8%p 증가)

○ **노조 정기현황 관리 강화를 통한 노동통계 신뢰도·정확도 제고**

- **(조직현황 통계 개선) 행정관청**(지방관서, 지자체) **대상 교육**(5회) 및 **모니터링**(매월) 등으로 노동조합 현황 **적극 관리**

▪ 특히, **서식 개정('24.1.1.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 **전년 대비 미제출 노조가 크게 감소***하여 **제출의무 이행이 개선**되는 등 통계 **신뢰도 제고**

* '23년 199개소(6,005개소 중 3.3%) → '24년 49개소(6,169개소 중 0.8%)
⇒ 미제출 노조 ▲(감소량) 150개소 ▲(감소폭) 약 2.5%p ▲(감소율) 약 75.8%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노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ADR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 당초 목표했던 쟁의행위 설명자료 마련, 노조 조직 현황 통계 정확성 제고 등 일부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쟁의행위 설명자료 검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등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주제**로 **노동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내용 검증 등 필요**

○ **(통계 발표시기 단축 가능)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관리**(전수조사→ 휴면노조 등 해산·소멸→ 이후 확인대상 감소)로 **차년도 조사·분석기간**을 **단축**하고 **발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 ▲('22.12월 기준) '24.1월초 발표 ▲('23.12월 기준) '24.12월 발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양호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성과가 향상 노조의 제출 의무 이행 정도가 크게 향상
4. 정책 환류	보통	정책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1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평가결과) 183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평가, 성과가 **미흡**한 **83개** 사업에 대한 **예산감액** 및 **사업개선** 권고

구분	**'24년 성과평가**('23년 사업)					
	평가대상	등급대상	우수	양호	**개선**	**감액**
합계	183	169	12	74	**67**	**16**

* 하위등급 비율 확대(35→50%) 및 등급부여 유형 추가(5→7개)로 전년대비 개선필요.감액 등급 사업 수 증가(61→83개)

○ **(평가결과 환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에 대해 감액·폐지·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 '25년 예산안에 **12개** 사업 **폐지, 83개** 사업 **감액**(1조 3,700억) 반영

▪ 특히, **감액** 등급 **16개** 사업 중 **14개**는 **감액, 우수** 등급 **12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증액** 편성 ⇒ **성과지표 목표** 대비 **110.2%** 달성

- **저성과사업**(9개부처. 19개) 대상 **외부전문가** 활용하여 **컨설팅** 실시

○ **(투자방향 제시)** 절감재원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강화, 청년미래도약**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25년 예산안) 육아휴직급여 +1조 4,161억,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560억, 노인일자리 +1,581억, 장애인고용장려금 +601억,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2,024억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평가대상 확대) 신설·변경되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강화, 기존·신규 사업 중 **평가대상 편입 검토**(예정처 지적, '24)

* (교육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고용부) 청년미래플러스, (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복지부)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 사업에 대한 폐지 및 감액을 단행하였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14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강화 —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으로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

* 일자리창출 129,319명, 교육훈련 1,191명, 고용서비스 142,281명, 고용장려금 31,940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패키지 지원**
→ 하청 근로자의 고용조건 향상

* ①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경남, 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130억지원), ②지역 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충북-식품제조업, 경남-우주항공업, 41억), ③자동차부품 및 석유화학 상생 협약 확산지원(경기, 경북, 충남 등 11개 광역자치단체, 88억)

○ **지역-중앙, 관계부처간 협력확대를 통한 일자리사업 체감도 제고**

- 지역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실시***('24. 5개소)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순환 모델 구축 지원

* 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과 업무협약(MOU) 체결('24.3):
▲부산(관광·MICE), ▲인천(뿌리), ▲경북(자동차부품), ▲전북(농식품), ▲충북(반도체)

○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시행**('24.4.25) 및 **고시 제정**('25.1.10)하여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필요사항 명시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4.4.25)하여 산업전환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의 법적 근거 마련

*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로 구성(11.18), 석탄화력발전소 고용안정 방안 집중 논의(12.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빈일자리 해소 및 이중구조 개선 지원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사업 인지도 및 체감 성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확산 등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양호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지원 등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정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장·차관 방문, 업종별 워크샵, 현장간담회 및 업무협의체 운영

15	일자리 정책 효율성 제고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정부 일자리 TF」**(고용부·기재부 합동)를 통해 **일자리 이슈 전반**에 대한 **선제적·전문적 논의** 진행(24년 총 10회)

- 15차**사회이동성 개선방안,** 19차**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19차**청년 고용 지원방안,** 22차**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마련

○ **고용정책심의회***(5회) 및 **일자리 정책 포럼****(6회)으로 주요사항 논의

*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검토 등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인력수급,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소장 회의**(6회), **본부-지방 간담회**(3회), **권역별 현장 간담회***(6개청)로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고용실 각 국장이 중부청, 부산청 등 6개청 방문 → 정책 공유 및 현안 논의

○ 고용정책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고용정책 브랜드 이미지** 마련

○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통하여 **주요 소관부처 정책의 고용효과 개선**

* 정책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 제언 → 부처 수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용둔화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

* 취업자수 증감 전망치(만명, 한은): ('23) 33 → ('24) 17 → ('25) 13 → ('26) 10

○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 수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고용지표 전반 및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등 지표가 양호한 수준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16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강화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충분한 외국인력 공급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

- **(도입 확대)** 쿼터 확대(16.5만명), 규제 개선으로 **역대 최대 인원 근무**

  * 체류인원(만명): ('19) 27.7 → ('21) 21.8 → ('22) 26.8 → ('24) 33.6

▪ **외국인력(E-9) 고용 사업장 85%(1.9만개소)는 30인 미만**으로,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중심 인력난 해소

- (허용업종 요건완화) 산업현장의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❶음식점업('24.7.) 및 ❷뿌리업종 중견기업('24.10.) 요건 개선**

  * ①음식점업(한식 → 외국식, 100개 지역 → 전국으로 확대)
    ②뿌리중견기업(본사·사업장 모두 비수도권 → 본사 수도권인 경우도 허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강화**

- **(지도·감독 강화)** 근로감독, 산업안전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 사업장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 (지도점검 대상확대) '23년 5,500개소 → '24년 9,000개소<목표 1,000개소 추가확대>

▪ 제도안내, 근로조건·산업안전 진단 등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신설**(5월~)

- **(체류지원 서비스) 다국어상담 및 한국어교육 확대, 지자체 주도**의 상담·교육 및 다양한 **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 (전북) 금융, 노무, 법률 등 지역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상담 인원·분야 확대
  (광주) 지자체·출입국·지방노동관서 합동 상담, (대구) 한의학 무료진료·이미용 서비스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숙련된 외국인력**,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성과목표를 달성함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허용업종 등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외국인력 공급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지도점검, 설문조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

17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추진) 노·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논의**, 의원입법안 발의(11.7, 임이자 의원)

- **(보험사무 간소화 지원)** 영세사업주의 조세·사회보험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신고사무**를 **지원**하는 **"보수원클릭서비스"** 개발·운영('24.5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8.29), **사업 연계 강화** 노력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중기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시행(11.29)

○ **(실질적 사각지대 발굴·해소)**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47만명 발굴·가입 등 조치** ('24.12월 기준, 누계)

- **(가입 활성화)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 현장 홍보·집중신고 기간** 등 운영 → **최근 3년간 가입자 11.2% 증가**
  ('22.12. 78.6 →'23.12. 84 → '24.12. 87.4만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가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 필요

- **(가입 활성화)** 국세정보 연계 제고 방안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 발굴**과 더불어 생활접점 매체 등을 활용한 **제도홍보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가입누락자 발굴,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 홍보 점검 등을 통한 가입자 발굴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여
4. 정책 환류	양호	제도개선 방안 도출시 노·사,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과 적극협의하여 현장의견 반영

18	구직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지속 상승**

- **수급자 재취업률**은 **現 정부** 들어 지속 상승하여 **'16년 이후 7년만**에 **30%**를 **초과 달성, 금년**에도 **지속 증가**

  * 재취업률(%): ('18) 28.9 → ('19) 25.8 → ('22) 28.0 → ('23) 30.3 → ('24) 30.6

- **65세 이상 고령층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인센티브**를 **개편**하여 **조기재취업 대폭 확대**

  * '24년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8,283명으로 전년대비 10.6% (+796명) 증가했으며, 이 중 선지급자는 2,701명

○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7.19.)**

- **반복수급자 급여 일부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現 1주 → 2~4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 **환노위 상정**('24.9.9)

○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라는 기조하에 적발·예방활동 강화 등 엄정 대응**

- '2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액**은 **323억원**, 전년대비 **7.3%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노동시장 참여형 구직급여 제도개편안 마련', '특별점검 횟수' 등 성과지표를 적절히 수립하였으나,

-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의 목표치는 전년과 유사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다소 부족함

○ 부정수급 적발 및 반복수급 개선성과는 대국민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반복수급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수급자 재취업률 증가, 반복수급 개선 입법 추진 등 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성과
4. 정책 환류	보통	부정수급 방지 및 고용보험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정책개선을 추진

19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체감 성과 양호)** '24.12월말 기준 **참여 인원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참여자 **만족도·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주요 질적 지표 상승**

* (참여인원) '24.12월말 기준 31.8만명 참여하여 목표 대비 참여율 102.3% 달성
(만족도) 4.17점으로 '23년 4.15점 대비 다소 상승하는 등 긍정적 평가
(취업률*) 10월 기준 60.6%, 전년(59.3%) 대비 +1.3%p
* 취업률은 다음연도 4월 최종 확정
(6개월 고용유지율) 10월 기준 71.4%, 전년(70.3%) 대비 +1.1%p

○ **(현장 친화적 제도개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년연령 확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법률 개정, '24.2월 시행)

* (청년연령 확대) 18~34세 →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
(구직촉진수당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월 57.7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지 → 소득과 구직촉진수당 합산 월 133.7만원 이내에서 소득활동 가능

○ **(연계·협업 강화)** 금융위, 복지부, 중기부 등 **부처 간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 → 취업취약계층 발굴**하여 **복합 애로사항**을 **함께 지원**

* (금융위) 고용부-금융위 복합지원방안 발표(1월), 서민금융진흥원과 고용센터 연계 강화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방안 발표(2월), 지역별 맞춤형 채용행사 추진 등
(중기부)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자영업자 발굴,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 마련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참여자의 복합애로 해소**와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성과목표치 달성정도가 우수함 참여인원, 만족도, 취업률 등의 성과가 우수하고,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 우수
4. 정책 환류	보통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현장 간담회,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유관기관 및 국민신문고·제안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

20 고용센터 취업 및 채용지원 기능 강화 —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구직자**심화상담매뉴얼**, 기업**컨설팅 운영모델** 개발, 1:1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일자리매칭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수요데이**(채용행사, 직무설명회 등)**」 운영**('24.11월, 채용행사 2,380회)

○ **(고용·복지·금융 협업)** '24.12월 전국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연계건수**는 **20.6만건**으로, 전년동기('23.12월, 14.3만건) 대비 **6.3만건**(+44.0%) **증가**

○ **(통합네트워크 추가 구축)** 지방관서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관 2개소**(서울·아산센터) **선정,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맞춤형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성과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 신규 구축**('25년)과 함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및 소통강화 노력 병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성과목표를 달성함 구직자·기업 밀착 고용서비스로 취업실적과 참여자 만족도 상승 등의 성과
4. 정책 환류	보통	현장소통, 교육강화, 현장 회의, 모니터링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추진현황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운영매뉴얼 개정, 전산개선 등의 정책집행과정에 반영

21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1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 확대**

- 국정과제 **AI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9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처리**할 수 있는 **'고용24' 안정적 운영 중**(정식운영, 9.23~)

  * (주요 기능) ❶개인·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안내, ❷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추천, ❸타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회원·방문자수·앱 다운로드 모두 증가, 고객만족도**도 **향상***

  * 회원수('23년 660만 → '24년 999만), 일평균 방문자수('23년 22.4만→'24년 82.3만), 앱 다운로드('24.7월 14만 → 11월 71만), 고객만족도('23년 78.0 → '24년 81.9)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AI 일자리 매칭, 잡케어** 서비스의 **알고리즘 개선과 정보 확대, 사용자 편의 향상**으로 **이용자 대폭 확대***

  * '23년 16.3만명 → '24.上 22.6만명 → '24.10월말 37.1만명

- **「AI 기반 7대 시범과제」**(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24~'26, 45억원), **「디지털 이력서」** 등 **구인·구직 편의 향상 및 매칭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도입

○ 고용행정데이터 **신규 표본데이터셋 2종 추가 민간 개방**('24.6)

- 旣 개방한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중 이용도가 높은 4종을 데이터안심구역 분석시스템에 **탑재, 접근성 제고**('24.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용24 정식 운영 이후 시스템은 안정적이나,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고용24 고용서비스 통합채널 구축과 이를 통한 AI 매칭, 잡케어 활용 건수 등 취업성과 제고 국민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직원 업무효율 향상,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각종 고용정책·사업 평가 등에 기여
4. 정책 환류	양호	고용24 오류의 신속한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대국민용 잡케어 개편 및 모바일 잡케어 구축

22	고용노동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용동향 분석 및 전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국정과제 **산업구조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을 위해 분석기능 강화

▪ 올해는 **성과지표를 산출에서 결과**(정책부서의 활용 건수)로 전환, **성과지표를 한 개 추가 신설**하는 등 도전적인 성과관리 추진

* '고용관련 이슈 분석'은 단순한 생산 건수에서 실제 정책부서 등의 활용 건수로, '인력수급전망 고도화'를 새로이 성과지표로 포함하여 적극적 성과관리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회의에 **16회 상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대응방향(1월)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5월 고용 특이동향 분석(7월)

▸(일자리 TF) 고용동향 안건 상정시 고용동향에 대한 동향분석 지원(1-11월)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3.15.)
건설근로자 고용·생활안정 지원대책(3.15. 협업) 등

▪ 대내 정책부서 사업수행 및 정책대안 수립시 **20회 이상 분석 지원**

*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임금체불 실태와 대응방안, 생산가능인구 감소 극복 노동시장 대응방향, 청년일경험지원, 고용위기지역·업종 지정 등(세부내역 후술)

▪ **추가필요인력*에 대한 전망을 신설,** 165건 이상 보도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환기

* ('24.3) 향후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필요인력 규모를 업종,직종별 발표<2006년 전망 신설 이래 최초>

○ **기존 정량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장중심의 이슈 분석 확대**

- **총 43차례 FGI**를 통해 데이터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던 **현장 이슈 파악**

* 건설업, 음식점업, 사회복지업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중 건설업은 실제 8월 정책부서의 대책으로도 연결되는 성과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용노동통계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보다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이 필요하고,

-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통계의 확장적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체계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위기업종 중심 현장 기반의 데이터 수집 체계화 및 이슈 분석**

* 올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임시 인원을 구성하여 현장 FGI를 수행, 내년에는 연초부터 **한고원에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고용노동 정책 수립, 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수립 등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현장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을 신설해 과거보다 더 세밀하고, 민첩하게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23	조사통계의 정책 대응성 강화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高품질 고용노동통계 적기생산을 통한 통계활용도 제고**

- 국정과제 **산업구조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고품질 통계 **적기생산**과 이를 통한 **관련 연구 및 정책 추진 뒷받침**

→ 통계청 주관 '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우수기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최우수(1위) 통계로 선정**

→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용자가 제한적임에도 우수한 통계 품질관리와 적기생산을 통해 **이용건수 전년대비 36.0%(652건↑) 증가**

○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통계 확대 및 세분화, 안정화**

-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세밀한 정책대응이 가능토록 통계 공표범위 확대 및 세분화 작업 지속**

▪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공표범위 상용 5인 이상→1인 이상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및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논의 지원

▪ **(산업중분류→소분류 고용통계 세분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급변하는 산업구조 모니터링 가능 → 세부 산업별 일자리정책 지원

▪ **(직종소분류→세분류 임금통계 세분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통계 세분화 →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통계청 KOSIS 사이트를 통한 **통계DB 이용 건수 전년대비 5.6%(130천건↑) 증가**

○ **통계 품질관리, 적기 생산, 세분화 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통계자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과거 3년간 평균수준의 **목표치(74.5점)를 초과 달성(75.2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나, 목표치를 3년 평균 수준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자체가 적극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수준

-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서 조사통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분석을 고도화하는 등의 발전 방안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미제공 중, 향후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노동통계 자료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통계 사각지대 해소, 통계생산 안정화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조사과정 모니터링, '정기품질진단' 및 '자체통계품질진단' 전문가회의 및 연구용역, 팀장 간담회, 노조간담회, 현장소통 등의 현장 의견 수렴

24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확산 노력 —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유연근무** 도입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400개소)·**인프라**(155개소)·**장려금**(5,535명, 전년 대비 56% 증가) **패키지 지원**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확대**(10,405명, 전년 대비 44% 증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개를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최초 선정**, 위상 제고 및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 지속 확대** 추진*

* 보증(신용보증·기술보증)·정책자금·출입국 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제혜택 등

○ **경제단체 협업** 통한 **CEO 인식개선 및 일·생활 균형 확산 추진**

- **중소기업 5개 협·단체와 MOU 체결**(7.15, 장관), **25,000개** 기업에 **월간 뉴스레터, 463개 이상 기업**에 **강의, 홍보물 배포** 등 진행

- **공익광고·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해외사례 현장취재·보도**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 협조를 통한 **수요 확대**와 교육훈련을 통한 **품질개선 추진**

- 서울시 가사서비스 사업 인증기관 10개소 선정, 민간기업 복지몰 입점 등 인증기관은 **전년 88개소에서 122개소로 확대**

- 1,400여명의 가사관리사가 **교육훈련을 수강,** 자체 교육도 활성화*

* 인증기관 95.5%가 가사관리사에 자체 교육 제공('24년 가사서비스 실태조사, 노동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저조**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여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일생활균형 제도 효과는 사업목표와 적절히 연계된 지표이나, 가사근로자법 시행효과는 사업전반의 목표를 반영하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우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분기별 추진일정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하여 계획된 추진실적을 달성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도입, 장려금 지원의 기업실적 증가 등의 성과가 있음 다만, 만족도 외 평가수준에 대한 확인이 제한적이고, 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4. 정책 환류	보통	현장방문, 제안창구 신설, 협업 홍보 등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정책환류는 양호한 수준

25	청년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의 성장 지원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이 조기에 커리어를 설계·준비하도록 대학 재학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 취업역량 향상 지원**

* ('23) 12개소(4.3만명) → ('24) 53개소(16.2만명 지원, '24.11월 기준)

○ **(청년 일경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청년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

- 원하는 청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원 확대***, '24.12월 기준 **5,172개 기업**에서, **4.9만명**에게 일경험 제공(목표 대비 103.7%)

-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직무탐색, 참여기업 이해** 등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참여청년 만족도 88.6점), **기업**은 **우수인재 탐색·확보, 기업인식 개선 측면**에서 긍정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이후 **최종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경험 등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연계** 및 **체계적 이력 관리**에 한계

○ **(청년 일경험)** 경력 채용 경향 심화 및 일경험 직무 등의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25년 일경험 **지원규모 확대** 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객관적 지표들을 적절하게 선정함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양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비 추진성과가 이행되었다고 평가됨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대학 재학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 취업역량 향상 지원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
4. 정책 환류	우수	전체 운영대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범부처 협의체,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발전방안 등 논의

26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지원규모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청년 수(목표/참여): ('23년) 8,000/6,775명 → ('24년) 9,000/9,812명

- 참여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으로 **연계율 지속 상승**

* 타 취업지원 정책 연계율: ('21년) 55.1% → ('22년) 61.5% → ('23년) 68.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6만개 기업에 **90,862명***의 취업애로 청년(장기 실업, 고졸 등) 채용 지원(총 4,870억원)

* 전년 동기 78,658명 대비 15.5%(12,204명) 증가

- ①타 사업, ②타 부처 및 ③중소기업 사업주단체와 연계하여 **사각지대 청년 지원** 확대*(**목표인원: '23년 9만 → '24년 12.5만**)

  * ① 일학습병행 수료 청년 등 지원 연계, ② 혁신적 조달기업(조달청) 등 우대, ③ 경총·노란우산공제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하여 기업 홍보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청년층의 높은 관심으로 지원 목표 신청 조기 달성('24.5, 24,800명) → 입직 초기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이 더 많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밀착 지원하도록 체계적 발굴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운영주체) 참여 확대 필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난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강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취업성공 인센티브 신설,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성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평가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27	공정채용 확산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정한 채용문화의 현장 확산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제도 컨설팅***, CEO·인사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채용 교육 확대**로 기업의 **자율적 채용관행 개선** 지원

  * '23. 150개소 → '24. 기본형 **200개소** + 심화형 **200개소**
    ↳ **직무적합자 지원율 상승**(9.7%p), **조기 퇴사율 하락**(5.4%p) 등 가시적 성과

- 청년들이 원하는 채용문화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숏폼 공모전" **신설**, 공정채용에 대한 **MZ세대 관심 제고**(60개팀 참가, 10개팀 시상)

○ **위법한 불공정 채용행위 점검 대상 확대**

-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 취업포털**(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상 현행법을 위반한 **채용공고 지도·점검 최초 실시**('24. 471개소)

  * 그 외 사전 모니터링 통한 위반 의심사업장 집중점검 등 노력으로 현장의 공정채용 체감도 제고
    ↳ (공정채용 시정조치율) '22. 13.3% → '23. 35.2% → **'24. 49.8%**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권익위, ~12월)에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추가

○ **「공정채용법」 발의를 위한 국회 논의 지원**

- **청년·기업·전문가** 등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현장간담회, 포럼, 설문조사 등 15여회)을 통해 채용절차법 전면개정안인 **공정채용법(안) 마련**

-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黨 노동전환특위 논의**(10.30, 11.13.) 진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채용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모니터링**이 담당 부서별로 운영 → **체계적인 지도·감독** 필요

* ▲채용절차법(신체조건 등 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등) ▲남녀고용평등법(성별 상 차별 금지) ▲고령자고용법(연령 상 차별 금지)

○ **공정채용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인사·노무 관련 추가적 컨설팅* 수요**가 많은 편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원 필요

* 예: ▲임금관리체계 개선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운영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타당하고 적절하게 선정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채용절차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권역별 공정채용 설명회 진행 등 공정채용 문화 확산의 정책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28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40·50]** 준비된 **이·전직** 및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 전직·재취업을 앞둔 중장년에게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전직 지원·경력개발·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에는 재취업지원제 도입 지원

  * **산업·지역·기업별 채용수요 기반 중장년 맞춤직무 발굴 등을 통해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 **[60⁺] 계속고용** 제도화 논의 및 **자율적 확산** 지원

-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실태 **논의**(6.27~12월, 12회),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도입 확대*** 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 계속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상향(2년 → 3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제2의 주된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 중이나, **일방적·단편적**으로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장년층 취업성과, 정년퇴직 후 동일사업장 재고용인원 등 지표가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40+, 50+, 60+ 등 중장년,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인수요기반 지역-산업-직무 매칭 사례발굴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
4. 정책 환류	우수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과 TF 구성,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 등 정책 소통과 부처별 협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29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육아 양립 지원 강화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일·육아 지원제도 확대**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9.26)

  * 일·가정 양립 지원예산을 2.7조원 → 4.4조원(+62.8%)으로 확대 편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하위법령** 개정(12.17, 국무회의 의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급여 특례)**" 확대 시행** 등 **소득지원 강화** 및 **부모 맞돌봄 확산**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일·육아 동행플래너"** 서비스 제공 및 **경제단체와의 캠페인 전개** 등 **육아지원제도 확산 지원**

☞ ('24년 수급자 증가) **육아휴직**(13.3만명, +0.7만명), **남성 육아휴직**(4.2만명, +0.6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7만명, +0.3만명), **부모함께육아휴직**(5.2만명, +2.8만명)

☞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15~54세) **고용률 역대 최고**(62.4%, +2.4%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이나, **중소기업과 남성은** 여전히 **제도 활용 저조**

- **육아휴직 사용**은 **대규모 기업,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남성의 제도 활용도 제고 필요**

  * 기업규모별 급여 수급자 비중('24): (10인 미만) 18.0%, (300인 이상) 41.3%
  ** 성별 급여 수급자 비중('24): (남성) 31.6%, (여성) 68.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제도 활용도 저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육아지원 3법의 국회통과 및 시행, 급여 지원기준 상향,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평가
4. 정책 환류	양호	현장 의견 청취, 사업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한 근로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고, 현장 이슈의 공유·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등 정책 집행에 반영

30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별 고용률**(15세 이상) **격차**는 ’00년 23.5%p→ ‘24년 16.2%p, **임금격차**는 ’00년 41.7%→ ‘23년 29.3% **지속 하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충족**을 위한 **자율개선 유도** 및 **명단공표**(32개사, ‘24.5월)**·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변화 촉진**
- **(사업장 지도·점검)** 정기감독, 현장예방점검의 날, 기획형 수시감독 등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및 **일·육아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20,000건**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 광고 195건 적발 → 특정성 채용을 기피하는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

- **(고용평등상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해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고용평등상담지원관(8개 대표(지)청) + 권리구제지원팀(48개 지방관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고용률은 역대 최고치** 기록, **성별 임금격차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OECD 주요국 대비 미흡**

  * 15~64세 여성고용률('23), 임금격차('22): 우리나라(61.4%, 31.2%) / OECD(67.0%, 11.4%)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고용평등 상담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 시 신속한 권리구제 등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적 효과 측면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근로감독, 고용평등상담지원 등을 통해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

31	고용저조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장애인고용 컨설팅 확대·내실화로 장애인 고용 지원**

- 기업 맞춤형 **직무개발** 및 **채용연계 컨설팅 지원 확대**('24.11월 572건)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24.4월 오픈)을 통해 **고용역량 자가진단·업종별 사례** 서비스 제공

○ **표준사업장 확산** 및 **연계고용 활성화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 허용,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방안** 마련·추진('24.下 관련법 개정안 발의)
-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신규 도입('24년 47개소, 176품목)하여 원활한 수의계약 및 판로 확대 지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확대**(국가·지자체) 및 **한도 상향**(60→90%)

○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훈련센터 확충**('24년 4개소 추가) 및 IT수준별 훈련과정 운영
- **경기남부직능원 개원**('25.3월, 동탄)을 통한 수도권 훈련 사각지대 해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기업, 일부 부처**(교육청, 국방부, 교육부) **공무원** 부문 **고용저조**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양호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기업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규제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4. 정책 환류	양호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에서 고용역량 진단 실시를 통해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32	사회적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7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새로운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현장 안착**

- **'24년 인건비 등 직접지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판로·성장지원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으로 **전년 수준 유지(약 3,762개)**

▪ **신규 인증기업(236개)은 매출·근로자 수 개선 등 질적 내실화***

* (평균 매출액) 8.8억 → 11.8억, (근로자 수) 9명 → 14명

- **전체 고용인원 및 취약계층 고용인원 지속 증가*** **등 사회적 목적 충실**

* 전체 고용인원(취약계층): '23년 71,950명(46,385명) → '24년 74,135명(47,655명)

○ **자생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확대로 **매출액 증가 성과**[**]

  * (공공기관 우선구매) '22년 2조 106억 → '23년 2조 2,558억으로 증가(+2,452억,12.2%)
  ** (총 사회적기업 매출액) '22년 6조 8,541억 → '23년 7조 2,851억으로 증가(+4,310억, 6.3%)

- 지자체·민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증가**[*] **등 SVI 활용도·만족도 우수**

  * (예시)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S-OIL 등 사업수행기관 또는 지원금 선정시 가점으로 활용

○ **전국 19개 성장지원센터 거점으로 현장 밀착 지원 강화**

- **민간위탁하던 인증·교육**[*] 등 **성장지원센터에서 직접지원 내실화('24~)**

  * (교육) 135회, 3,021개소, (컨설팅) 76회, (경영진단) 667회 등

- **지자체·민간·공공 등과 사회적기업 간 연계 강화(44억원·76개 협력)**

  * (지자체) 성장지원센터-지자체 정례 협의회 구성·운영(4월~)
  (민간) 제주항공 라운지 내 판매, (공공)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영상·콘텐츠 기업 지원

- **교육부 협력으로 사회적기업의 늘봄학교 등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지원**

  * 프로그램 공모(7~8월), 워크숍 및 컨설팅(9~10월), 교육부 추천(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를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만족도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나, 목표치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

○ SVI 측정체계 개편,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사회적 기업 직접지원 폐지(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제고 노력(판로, 성장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현장 안착
4. 정책 환류	보통	모니터링, 업무담당자 교육, 합동점검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였고, 이를 지침 개정 등에 반영

33	첨단산업·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 확대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양질의 훈련과정을 충분히 확보, 3.8만명의 신기술 인재 양성**

- 첨단분야 인프라 등을 갖춘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 도모

⇒ **'24년 76개 선도기업**(112개 과정), **20개 대학**(26개 과정) **신규 선정**

⇒ 896개의 양질의 훈련과정 확보('22. 416개 → '23. 621개 → '24. 896개)
3.8만명의 신기술 인재 양성('22. 22만 → '23. 3.2만 → '24. 3.8만명)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공급 영역을 확장**

- 현장의 훈련수요*에 맞춰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을 확대**, 디지털 분야 외 **첨단·융복합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신기술 역량 향상** 지원

* 향후 5년('24~'28)간 첨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약 42.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훈련분야)** 기존디지털 → 추가첨단·융합 분야 등 신기술 분야 전반
▲**(지원대상)** 기존구직자 → 추가재직자 및 사업주

○ **훈련생 특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훈련 강화**

- 획일화된 강의가 아닌 **훈련생 특성**을 고려한 훈련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고성과 맞춤형 훈련*' 트랙** 신설

* 훈련생 모집, 과정 설계, 취업 지원 등 훈련 운영 전반에서 훈련생 특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

⇒ '24년 15개의 민간 혁신훈련기관의 51개 훈련과정 선정·운영

○ **높은 취업 성과 ⇒ KDT 훈련의 우수성 확인**

- KDT 수료생들은 기타 훈련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유의미한 취업성과를 창출**

* ▲(월평균임금) KDT 263.3만원 > 디지털 분야 국기훈련 233.7만원
▲(1,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비율) KDT 18.0% > 기타 디지털 훈련 6.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신규 추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모니터링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우수 훈련과정 발굴,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도기업과 우수대학 발굴 등 정책효과가 발생
4. 정책 환류	보통	훈련 참여기관과 T/F 개최, 현장 소통 및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임

3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훈련지원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의 산업구조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훈련 공급체계 구축(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2년 도입된 **산업전환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안정적**으로 **보급**

⇒ **충분한 훈련과정** 공급('23년 875개 → '24년 1,317과정)
훈련 실시인원 지속 증가('23년 18,111명 → '24년 19,042명)

- **태백·삼척 소재 탄광 폐업 예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직자의 훈련 수요**(중장비 등)를 반영한 **훈련공급, 중장년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24.6월 폐업), 피보험자수 416명(만 45세 이상 재직자 390명)

⇒ 인근 강릉 **폴리텍캠퍼스**(훈련과정 공급), **지자체**(장소 제공) 등과 **협업**하여 지게차 운전 과정 등 56명 지원

○ **산업전환 시대에 전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 제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디지털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민간 우수 훈련기관 중심**으로 **훈련과정 발굴**('23년 249개 → '24년 258개과정) ⇒ **훈련인원** 증가('23년 86,071명 → '24년 95,532명)

- **원격훈련**으로 **훈련 참여가 간편**하고, 과정 중 **다양한 실습과제** 및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하여 **집체에 준하는 훈련 성과** 달성

⇒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생이 **고르게 참여,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의 신기술 적응력 제고**에 기여

* ▲[34세 이하] 38,624명(46.2%) ▲[35~54세] 34,693명(41.5%) ▲[55세 이상] 10,350명(12.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경우, **성격이 다른 운영기관**(지역인자위, 산업인자위)이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과정 심사·공급
→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장점**을 살릴수 있도록 **차별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지역,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전화대응 특화훈련, 첨단산업 분야 신규 훈련과정 발굴 등 디지털 신기술 적응력 제고
4. 정책 환류	양호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기관-지역 훈련기관 간 소통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음

35	훈련 취약계층 대상 공공훈련 활성화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 하이테크과정) 신산업 분야 중심의 학과 개편** 등을 토대로 ▲**훈련규모 역대 최대 확대(+500)**, ▲**취업률** 75.6%('24.2월 수료생)

- **(학과개편) 반도체 학과 10개, AI+x** 및 **저탄소 학과 각 5개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 15개**를 **첨단기술 융합**으로 **개편**

- **(기업맞춤 인력양성 MOU)** ▲분야별 **선도기업과 협약** 체결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지원 ▲기업 견학 및 **현장실습 지원** ▲**우수인재 취업지원** 등 **훈련 현장성 제고** 및 **취업연계 강화**

* ▲[에너지분야(7.10)] 한전산업개발 ▲[AI·클라우드분야(7.17)] 22개 기업·기관 ▲[바이오분야(10.15)] 롯데바이오로직스 ▲[스마트물류분야(10.31)] 쿠팡풀필먼트

- **(단기 집중훈련)** 실제 기업체 장비를 활용한 실습, 10~12개월 동안 대학보다 약 300시간 많은(1,200h) 집중훈련 →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

○ **(중장년·여성) 취업성과가 좋은 적합직종**을 발굴하여 **특화훈련 확대**('23. 2,500→ '24. 2,550명), **양호한 취업률**(중장년 61.6%, 여성 65.7%)

- **중장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설비, 전기 등 **전통 산업분야**에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반영한 **DX-아카데미 개설·운영**

⇒ **'23년 DX-아카데미 구축 토대로 '24년 훈련과정 운영 시작**

* 서울정수캠퍼스 ▲자율주행자동차 직종 50명 ▲IT융합전기시설시공관리 직종 50명

- **노사발전재단과 공동 직업체험 주간** 운영('24~),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를 활용**하여 **직업탐색**을 통한 **훈련연계 기회 제공**

⇒ **13개 캠퍼스, 20개 프로그램 운영**(연계인력 249명 참여, 만족도 4.89/5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인재양성 양적규모 확대보다 훈련 품질을 유지하고 취업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

○ 훈련규모 확대, 실무형 훈련, 중장년·여성 대상 특화된 적합직종 발굴, 직업체험, 직업탐색 등 기회를 통한 취·창업 연계 측면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 물량확대 보다는 우수기업의 참여 등으로 높은 수준의 훈련 및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 관리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조업 불황**과 투자 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 2년 연속 훈련규모 역대 최대 확대**에 따른 **청년 하이테크과정 훈련생 관리 난이도 상승**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정책목표에 일부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입학자격 확대, 안전강화 및 신기술 훈련 공급 등 성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4. 정책 환류	보통	학과신설, 개편 시 현장의견수렴, 현장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정책반영에 노력함

36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업 진단-컨설팅-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훈련 지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주치의 확대 배치**('23년. 188명/23개 → '24년. 234명/32개 지부·사), **AI 기반의 기업맞춤 훈련추천** 시스템 도입, **14,125개 컨설팅**(목표 9천개 대비 1.6배), **9,402개는 훈련참여로 연결***

  * 컨설팅 후 훈련참여 연계 실적: ('23) 2,733개 → ('24) 9,402개 <'23년 대비 3.4배>

- **(체계적 현장훈련(S-OJT)) 기업별** 여건 진단 및 **문제해결식 훈련과정 개발까지 종합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하는 환경 마련**, S-OJT 참여기업 전년 대비 85.8% 증가('23. 1,332개 → '24. 2,475개소)

○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인 혁신훈련 확대 → 중소기업 훈련참여 ⇧**

- **(기업직업훈련카드)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부담을 면제**한 기업 직업훈련카드 **확대**('23년 1.3만 → '24년 2만개소), **50인 미만 기업 중심으로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 영세사업장 참여현황: ('23) 13,972개소 → ('24) 19,960개소

-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기업-훈련기관 간에 다양한 훈련과정을 한 번에 묶음계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발췌 수강**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훈련 규모 확대**('23년 7만 → '24년 10만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의 훈련인식 부족을 고려할 때, 훈련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훈련성과 등 확산 필요

○ **(기업직업훈련카드)** 50인 미만 기업 뿐만 아니라 **훈련 이력이 없는 기업이 훈련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확대,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인 기업훈련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등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 개선
4. 정책 환류	보통	중소기업 자문위원회, 간담회,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정책에 반영함

37	직무능력 중심 사회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무능력은행제 고도화 및 활용 확산**

- **(연계정보 확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국방부·국세청**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연계정보 확대***

  * [교육부] 평생학습계좌제, [국방부] 군 국방자격 및 간부 경력, [국세청] 개인사업자등록정보, [근로복지공단] 상용·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연계(3.16) [교육부] 고교 NCS 기반 교과 이수내역(NEIS) 연계(6.27)

▪ **고용24**에서 **직무능력계좌와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12.5)

- **(맞춤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교육·간담회, 직업계고 권역별 설명회 등 맞춤 홍보로 **목표 대비 계좌 발급 26% 초과 달성**

  * 계좌: ('23.12월) 11,282건 → ('24.6월) 20,851건 → ('24.12월) 62,965건(목표치 5만건 대비 26% 초과 달성)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

- **산업계·교육계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목**을 신설·운영하고 **참여기관을 확대** → 186개 종목, 211개 기관, 701개 과정(11월 기준)

  * ('23) 179개 종목, 194개 기관, 681개 과정 → ('24) 186개 종목, 211개 기관, 701개 과정

▪ 특히, 올해는 다년간의 노력에도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설하지 못한 **'전기' 분야 종목을 관계부처·협회 지속 설득을 통해 신설**하는 성과('25년 준비중)

  * 교육부·산업부·협회·인력공단 협업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설 결정

-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훈련시간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를 확대** → 10~20대 청년 13,724명 참여(11월 기준, '23년 동기 13,521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올해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 인기종목 신설, 전산 연계, 교육청 의견수렴 등** 유의미한 성과 → 자격-교육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협업체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보통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연계정보 확대, 편의성 개선 등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계좌발급 확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및 취득자가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발생하였음
4. 정책 환류	보통	직무능력은행 관련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정책에 반영

38	공동훈련 활성화	7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중소상생형 新 **공동훈련모델** 추진으로 **훈련 양극화 해소** 지원

- **대기업**의 우수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 선정·제공**(100개)을 통해 **대중소 훈련 격차 완화에 기여**

○ **재직자 중심** 훈련 강화로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의 **정체성 명확화**

- **지역주민, 학생 등**의 **디지털 기초교육**에서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신기술 분야 역량 향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개선 전) 11개 과정, 450명 훈련실시 → (개선 후) 217개 과정, 12,153명 훈련

○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 확대** → 산업전환 대비가 취약한 **협약중소기업 역량 강화 + 지방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기회 확대**

-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분야의 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훈련인원 및 수혜 협약중소기업 수 확대

  * ▲(공동훈련센터) '23. 20개 → '24. 25개(+5) ▲(수혜 협약기업) '23. 1,811개소 → '24. 3,460개소
    ▲(훈련인원) '23. 약 9천명 → '24. 약 1.5만명(+6천명)

- 올해 선정기관들이 비수도권(음성·목포 등)에 위치 → 상대적으로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적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향후 훈련 성과 비중을 강화하여 현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표도 검토할 필요

○ 언론 홍보,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공동훈련센터 모델 추진, 재직자 역량 향상 등 정책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일부 달성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8개 → 2개)이 **형식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인 **내실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 추진으로 대중소 기업간 훈련 격차 해소, 협력사 재직 근로자 역량 향상
4. 정책 환류	양호	다양한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개선에 반영함(훈련대상조정, 재직자 중심 훈련, 훈련 자율성 확대 등)

39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행이 필요한 **고위험사업장을 우선으로 컨설팅을 지원**,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대폭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0.915‰ → 0.444‰(51.5%↓), '23년 및 '24.9월 산재승인 통계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3년 대비 1만개소 확대하여('23년 16.5천개소→'24년 26.5천개소)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턴트 교육, 현장점검·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 관리 강화

  * '24년 현장점검 1,250개소, 상시 모니터링 민간 2.1만개소 전수 문자 설문 실시
    → 부실기관 시정요구·계약해지 등 조치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 **대기업**의 **안전보건 투자**(+11억원)와 **사외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참여 협력업체**의 **사고감소**에 기여

  * ▵ 사외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23년 25.2% → '24년 35.5%
    ▵ '24년 참여 협력업체 사고사망만인율: '23년 0.23‰ → '24년 0.1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위험사업장의 컨설팅 사후점검 등 후속조치 필요**

- 50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해 컨설팅 후 위험성평가 지속을 위한 사후점검, 교육 등 .후속지원 필요

- **업종·위험도** 등을 반영한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 및 **위탁기관 평가** 등을 통한 **컨설팅 질 제고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통한 컨설팅 기업의 산재예방의 실질적인 효과
4. 정책 환류	우수	상생협력포럼, 노사 의견 등 현장의 의견을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

40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감축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각 성과지표별 목표 초과 달성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2014개소(100.7%) 실시

▪ 기술지도 등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23년 27건→'24년 10건)

▪ 특히, '24년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사고 미발생**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고 건수	18	18	17	21	27	10

- **화학사고 경각심 및 예방 문화 확산**

▪ **화학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최초 작성한 **화학사고 사례집*** 및 **핸드북**** 발간·배포

* 고용부·공단 누리집,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을 통해 배포 (사업장 7,827개소 배포, 전자책(E-book) 다운로드 217회)

** 기술지도 사업장에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 배포(4,014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지산업 등 **新산업 화학사고 예방 필요성 증대**

- 전주리싸이클에너지 폭발사고,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이 **新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사고 다발 가능성 증대**

* 전주리싸이클에너지 폭발사고('24.5.2., 1명 사망), ㈜아리셀 화재사고('24.6.24., 23명 사망)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건수가 감소
4. 정책 환류	보통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41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강화	7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4년 11월까지 총 87개 단체에서 참여, 공동안전관리자 363명이 채용되어 3,474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 **업종·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협·단체의 참여**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설득 용이 및 현장 적용성 제고

-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참여를 계기로 **참여 협·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및 **소속 사업장**으로의 **안전인식 확산 효과**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이후 자체 산업안전 조직 보강 및 협의체 등 구성 사례(시멘트협회, 경북경총 등)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장 사고성재해자 감소**

-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장(3,474개소) 전년 대비 사고성 재해자수* **'23년 268명 → '24년 203명으로 감소(△65명, △24.2%)**

* 사고성재해자 = 업무상사고재해자 + 사고사망자 ('24년 9월 공식통계 기준)
**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업 참여이후 사망사고 미발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연초에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 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인지도가 부족하였고, 직접채용*의 문제, 자부담** 등으로 협·단체의 참여도가 당초 계획보다 낮았음**

* 직접 채용에 따른 노무관리, 근로기준법 적용(5인 이상) 등
** 자부담 비율 20%, 1인당 월 70만원 가량을 협회에서 부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으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인식을 제고
4. 정책 환류	우수	협단체, 지원사업장 등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42	위험성평가 점검 등 산재예방 활동 강화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기획감독 목표 초과달성 예상**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1,990개소**(99.9%) 실시*

  * 12월말 기준 12,100개소(100.8%) 실시 예상

- **(기획감독) 지역별 산재사고 다발 업종·사업장** 등 특성에 맞춘 **기획감독 2,486개소**(124.3%) **실시**

  * **(주요 사례)** ▲조선업(부산, 울산, 통영 등), ▲산림사업장(강원), ▲시멘트 제품 제조업체(안양), ▲화학사고 발생사업장(여수), ▲실내사격장(제주) 등

○ **3대 사고유형 집중점검, 지역·업종 특화 감독**으로 **중대재해 감소 견인**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전체 사망사고 60%**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위험요인 집중 발굴·개선 → 3대 사고유형 사고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37명, 10.7% 감소**('23.11. 345명 → '24.11 308명)

- **(기획감독) 조선업**('24.上 14명 사망, 전년동기 대비 4명 증가), **전지업체**(6.24. 화성 23명 사망 관련) **대대적 기획감독·점검** 통해 안전 경각심 고취

▪ **상반기 중대재해 집중** 발생한 **조선업**은 5월부터 **부산권역 기획감독** 등 적극 추진 → **하반기 재해발생 감소**
('24.7~11월말 3명 사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고 후 동종 업종·유형 재해 예방** 위해 **기획감독** 등을 추진 중, 평상시 **위험징후 파악, 상황 공유 및 예방조치** 등 **선제적 관리 강화** 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3대 사고유형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발생
4. 정책 환류	보통	추진과정에서 지방관서와의 긴밀한 협력

43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멘토링)** 전문건설협회, 지자체 등 **관련 협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 → **2,550개사**(106.3%) 멘토링 제공

○ **(추락재해 예방 감독)**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발굴한 추락재해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2,650개소**(106.0%) 집중 감독

* 추락 예방 자율점검표 배포 41,116개소, 캠페인 597회, 교육 15,912명 병행

○ **(안전멘토링) 고위험 전문건설업체**에서 **사고사망자 26명 감소**(△26.8%)하여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31명, △11.1%) **견인**

-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운영 등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역량 향상**

○ **(추락재해 예방 감독)** 추락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21명, 12.9% 감소**하여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율 11.1%**를 **상회**

<참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연도별 11월말 기준)

구 분	건설업 전체	고위험 전문건설업	추락재해
'23.11월	279명	97명	163명
'24.11월	**248명 (△11.1%)**	**71명 (△26.8%)**	**142명 (△12.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지도·점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확인·개선**과 원·하청 안전관리 **상호 협조체계 구축·이행** 상황 등 **현장의 지도·점검 강화 필요**

○ **(추락재해 예방 감독)** 추락재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독과 함께 안전시설 임차·구입 **재정지원 등 자율개선 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안전멘토링 집중 제공 고위험 업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짐
4. 정책 환류	매우우수	현장 및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루트와 방식을 통해 정책과제가 이행되었고, 전문건설업체 중대재해 예방 효과

44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 + **'사고백서'** 등 발간

- **(중대재해 사이렌) 실시간 네트워크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운영 활성화***, **타부처 벤치마킹**(우정사업본부 등) 등 효과성 입증

▪ '23년 연간 사고속보 및 산재예방자료를 모아 **책자로 발간**('24.4월)

- **(사고백서 발간)** 중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2개 사례를 백서**로 작성하여 공개(12.9)

▪ **재해원인** 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여건**을 **생생하게 전달**

○ **수사 역량 제고** : 수사 **'조직·인력'** 확충 +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 **(조직·인력)** 중대법 신속·공정 수사를 위해 **최대규모로 조직·인력 보강**

▪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던 7개과 2개팀 근로감독관 138명에서 **13개과 2 팀* 233명으로 확대**(6개과 95명↑)

- **(감독관 역량) 지방 순회 교육, 수사 실무 교육**('24.6월) **등**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 수사 기법, 법리 쟁점 등 **일관된 수사 및 현장 노하우 공유**를 위한 **지방관서 수사회의 실시**

⇨ 올해 법 확대 시행 후 감소하던 **사건처리율**이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속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역량 개선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백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예방적 효과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추세에 있고, 수사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율도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
4. 정책 환류	우수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를 개선함

45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 중복 등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낡고 오래된 규정은 현행화**(총 34건)

* ▲대정비보수 주기,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1~4→2~4년)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 울 설치 시 이동이 곤란한 경우 다른 추락방지 조치 허용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작업 와이어로프, 통나무비계 규정 삭제

○ **(안전조치 강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보다 강화**(총 7건)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소음청 난청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대상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표준제정위원회 확대·개편)**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한 기술표준·기술지원의 개발·보급을 위해 **표준제정위원회 확대**(위원 150→300명) 및 **개편 운영**(공단→고용부 운영)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예규)」 개정('24.2.27)을 통해 확대·개편 근거 마련

○ **(기술표준·기술지원규정 등 개발)** 전문가,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개정 안건 선정 → **총 139건**[기술표준(2건)·기술지원규정(133건)·고시(4건)] 표준위 **전문위원회 심의 완료**

* ▲최근 개정된 산안법령 내용, 해외기준 등을 반영한 현행화 등 제·개정
↳ 안전보건규칙에 산재해 있는 국소배기 등 환기설비의 성능 규정을 통합한 고시 제정
▲유사한 주제는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폐합
↳ 업종별 13개로 흩어져있는 근골격계 예방지침을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지침」으로 일원화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타 기준(KS 등)과 중복된 경우 폐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표준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된** 기술표준·기술지원규정 공표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우수	오래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에 기여
4. 정책 환류	우수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하에서 진행

46	위험공정 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 확보	2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술지원)** ’24.9월 기준 **기술지원 사업장의** 전년 대비 **사고재해자는 안전분야 55.7%(2,388명 → 1,058명), 서비스업 64.8%(2,938명 → 1,033명)** 감소

- **‘24.9월 기준 전년대비 사고사망자는** 제조업 **38.5%(13명 → 8명),** 서비스업 **100%(4명 → 0명) 감소**

○ **(안전동행 지원사업) 재정지원**을 받고 **위험기계·설비를 개선**한 사업장은 '24년 현재 **사고사망자 10명 감소, 공정개선 사업장 당 재해는 미지원 사업장 대비 0.336명 감소**('23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 '24년 **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은 1년 후에 재해감소 효과 분석이 가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술지원 사업)**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위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실시** 필요

- 사업장 운영기간, 업종별 재해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하거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중**

○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사업 **활성화 필요**

- **대기업(원청)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산재 위험이 감소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 기술지원 사업자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도 높음
4. 정책 환류	매우우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사항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47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기업과 달리 **신기술 도입·활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및 재해예방 향상*

* 지원사업장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4.1점(5점 척도, '24년 성과평가 결과)

- '24.12월 현재 **중소사업장 2,669개소**(350.0억원)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지원결정 사업장은 2,544개소, 395.3억원)

* '23년(1,132개소)에 비해 지원사업장 수 2배 이상 증가(117.3% 증)

○ **부처간 협업**을 기반으로 **중소사업장**에서 **활용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대상 안전장비 확대**

- 과기부, 중기부 등과의 **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품목 발굴*** 및 **부처협업형 지원사업**** **추진**

* 과기부에서 제안한 11개 품목 중 1개 품목, 중기부 84개 제안품목 중 6개 품목 등록
** (과기부) '지붕공사 작업자 추락재해 예방대응 서비스' 개발
(중기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23.4월 **17종**으로 **지원 시작**, '24.11월 현재 15종을 추가한 **32종**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및 **사업장 자율 신청품목** 지원

○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 **'24.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사고재해자 수 17명 감소** 등 **산업재해 감축 효과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원 품목**의 **다양화, 자율신청제도*** **신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 **계속**

* '24년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도 사업장에서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자율적으로 발굴해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제도를 도입하여 6개 품목 추가 지원

** '24년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원품목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음(29.7%)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매우우수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및 재해예방 향상
4. 정책 환류	우수	학계와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하고, 그 결과를 즉시 또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

48	직업병 예방·대응 체계 강화	3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올해 **근로자건강센터 1개소**(보령), **직업트라우마센터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직업건강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강원, 경기남부, 경북북부, 경산, 부산, 서울, 서울서부, 전남동부, 충북

- 근로자(특고 포함) **약 22만명**에게 **건강상담 지원**, 고혈압·당뇨 등 기초질환자 사후관리를 통한 **업무상질병으로의 이환 차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지원 내역

- **폭염 기간동안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설현장 등 **폭염 노출 사업장 2,163개소와 14,081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실시**
- **화성 공장화재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근로자·유가족 등 **64명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

○ **(직업병 모니터링 강화)** '24년에는 **경기남부 거점병원**으로 **아주대병원**을 **신규 선정**하여, **중부권에 대해 보다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중부권역의 근로자수는 660만명으로 전체 산재보험가입자의 32.7%, 산업단지 근로자 수는 75만명으로 전체 산단근로자의 32.7%를 차지('22년)

- 직**업병 의심사례 2,921건을 수집**하여 **예방자료로 활용**,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추적검사** 및 심층검진 등 **정부지원 사업 연계**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건강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안심센터) 지속적**으로 **협력병원 · 협력기관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매우우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획된 일정을 지연없이 모두 완수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실제 직업병 집단 발생 가능한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트라우마 센터 전문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만족도 조사결과도 양호
4. 정책 환류	우수	운영기관 의견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 추가 확보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집행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49	직업병 취약 사업장 지원 강화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취약사업장 **4,287개소**(11월말)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질환 예방 KIT* **22,264개 지원** 등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유증상자 관리****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

* 근골질환 예방 테이프, 관절보호대

** 통증호소자 138명를 발굴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등 사후관리 실시('24.10월)

- 근골질환 예방물품은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先 구매·신속 지급**하여 **예방효과 제고**

* <'23년 설문조사> 사업장 담당자 92.9% 근골격계질환 예방 테이프에 '만족',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절보호대(손목, 무릎 등) 지원 확대 요구

○ **(직업병 취약 사업장 컨설팅)**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암 발생 등 **직업병 발생 취약 사업장 3,635개소**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종합 컨설팅 지원**(11월말)

* <대표사례> ▲서울교통공사 정비근로자 8명 혈액암 집단발병('24.6.)에 대한 보건지도, ▲의료기기제조업 근로자 백혈병 사망('24.8.)으로 유사업종, 동일 공정 사업장 62개소 지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근골격계 및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 보건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이행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직업병 취약 사업장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 평가, 화학물질 노출수준 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적극 연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사업장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효과 근골격계 및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 보건관리 수준을 제고
4. 정책 환류	양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한 필요 물품 등의 적시 제공,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음

50	신속·공정 보상과 직업복귀 제고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재보상 제도개선)**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 중심의 TF 구성**(1.30.) **및 운영**(14회)

* 1분과(산재신청·승인), 2분과(요양·재활·보상) 체제로 운영하여 구체적 방안 논의

-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재해자의 **재활·사회복귀**라는 **산재보험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 **(신속 처리)** 단순·반복적인 조사절차 간소화 및 조사인력 확충·노후장비 개선·조사기관 민간위탁 확대 등 **인프라 강화**

- **질병 처리기간 감소추세로 전환(5월 240.7일→ 10월 229.4일)**

○ **(직업복귀율 제고)** 재해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연계 및 직장복귀 계획서 대상 확대** 등으로 **직업복귀율 1.3%p 향상**('23년 70.6% →'24.10월 71.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재보상 제도개선)** 노·사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 **(신속 처리)** 업무상 질병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여전히 처리 기간이 **약 230일 이상** 소요('24.10월)

○ **(직업복귀율 제고) 원직 복귀**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타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매우우수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관되어 난도가 높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보통	재해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연계 및 직장복귀 계획서 대상 확대 등으로 직업복귀율 1.3%p 향상
4. 정책 환류	매우우수	현장 의견 반영하여 의료인력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정책 집행에 반영함

51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천적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 전파**를 통한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 근로자 '안전행동 습관화'를 위한 **3대 안전 캠페인**에 **6천개사 동참**

  * ❶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❷사업장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하는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 ❸대국민 안전문화 홍보 '안(安)며들기 캠페인'

-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적극 전개**

▪ **핵심 안전수칙인 4대 금지사항**을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 **사업주, 근로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동반 성장** 활동 적극 추진

- **지역 축제** 연계 캠페인,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한 안전 메시지 노출,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 협약** 등을 통한 범국민 **안전의식 내재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우수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연계되어 난도가 높고, 정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3대 안전 캠페인 등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 전파를 통한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4. 정책 환류	양호	지역과 중앙에서 모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

52	지역 자생적 안전활동 촉진	5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업장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안전보건 포럼 총 141회 개최 지원

- 포럼 참여 대상 사업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교육·강의, 정책설명회 등 184회 개최 병행

- 포럼 운영 과정에서 지역내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협의체 추가 발족*** 등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 대전,세종,충청권 안전관리자 협의체

○ 24년에 신규로 안전보건 포럼을 추진함에 따라 「**“포럼 출범”-“포럼 운영”-“평가·환류”**」 등 체계적으로 **운영지원**

- 전국적인 확산 붐 조성을 위한 **릴레이 출범식** 개최(17회)

- 올바른 산재예방 정책 확산 및 지역 내 안전보건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포럼 총 141회 운영

- ‘24년 지역별 포럼 활동 **사례 및 성과공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안전보건포럼 컨퍼런스” 개최**

○ 지역기반의 포럼 활동으로 다수의 언론보도(50건 이상)를 통해 지역 **산업계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계획 수립 시 포럼 개최 이외에 구체적인 과제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신규로 포럼 구성·운영을 추진하였는데, 25년에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 발굴에 더 노력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산재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 체감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
4. 정책 환류	보통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53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원 강화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험교육)** 지상 2층 규모의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24.12. 개관)

- **중부**(인천 부평구) **안전체험교육장**의 **'25.12월 준공**을 위해 공단 담당자를 상주, **공정회의 개최**(6회) 등 면밀한 **공사 관리 진행**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과 관련하여 **후보지 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타당성 조사 실시('24.9. 완료)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

* 관계부처 합동「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수립·발표 ('24.8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OPS, 동영상 등 각종 **교육자료**를 **외국어**(16개국)로 **번역**하여 제작 · 배포('23년 95종 → '24년 190종)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24.11월, 10,169명)

* 중기중앙회·노사발전재단 등 취업교육기관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 파견 등 지원('24.11월, 44,479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의 성과가 있으나,

- 전국에 균형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질적 관리도 병행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4개 안전체험교육장(제천, 담양, 여수, 익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

○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실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과제 중요도	양호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의 계획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음
3. 정책효과성 (목표달성도)	양호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
4. 정책 환류	보통	주기적인 현장 공정회의 개최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책집행에 반영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①	■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 법률의 신속한 제정 필요	■ (지원사업 확대) 노동약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확대 ■ (법제화) 黨협업을 통해 「노동약자지원법」 발의 추진
I-1-②	■ 기업 임금체계는 장기간 형성되어 온 제도이며 노사 이견도 커, 단기간에 획기적 성과 도출은 한계, 향후 지속적 노력 추진 필요	■ (업종별 클러스터 조성) 컨설팅 참여기업, 전문가, 유관기관(국책硏, 비영리법인 등) 협의체 구성 →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허브로 활용 ■ (홍보) 계속고용 연계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과 중요성 홍보 강화
I-1-③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 필요 (現 임금·퇴직금·실업급여)	■ AI 노동법 상담의 범위를 육아지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확대
I-1-④	■ 유연근로제 도입률이 높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안내 필요	■ 노사의 근로시간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장시간 근로에 관한 노사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I-1-⑤	■ 근무시간 면제한도의 현장안착 상황 모니터링 필요	■ 면제제도 현황 정보공개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면제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 지원
I-2-①	■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경기적 요인과 함께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여전히 증가세	■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제수사 등 대응 강화 및 「'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수립('25.1월)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 지원
I-2-②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는 완화 추세이나, 여전히 관행화된 연공급제로 고용형태 간 구조적인 임금격차 잔존	■ 비정규직 차별 개연성이 높은 업종 및 익명 신고접수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 등 지속 추진
I-2-③	■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간 괴롭힘에 대한 인식차가 있어,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의 어려움 등을 호소 ■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언론 등에서 임금체불,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수 지적	■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판례 및 판정 사례 연구를 통해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인식차를 좁히고 신속한 분쟁해결 도모 ■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홍보·안내 강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집중 지도·점검(현장예방점검 등) 추진

I-2-④	■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가입유인을 지속 확대하고, - 현장설명회, 민간기업 MOU 확산, 집중 타겟 홍보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도입률 제고 지속 추진	■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회를 확대 * 【재정지원 요건】 최저임금 (現) 130% → (改) 150%까지 확대 추진 ■ 현장설명회, 민간기업 MOU 확산, 집중 타겟 홍보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도입률 제고 지속 추진
I-3-①	■ 수용성 있는 제도설계, 설계된 제도의 이행 촉진 필요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세부 사업계획 마련 및 수행기관 공모 등 추진
I-3-②	■ '24년 임단협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중심으로 교섭지원 및 분규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갈등해결 노력 지속 필요	■ 노사관계 취약요인 등 고려 '25년 노사갈등 관리방안 마련·시행
I-3-③	■ (쟁의행위 설명자료 검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등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주제로 노동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내용 검증 등 필요 ■ (통계 발표시기 단축 가능)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관리(전수조사→ 휴면노조 등 해산·소멸→ 이후 확인대상 감소)로 차년도 조사·분석기간을 단축하고 발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쟁의행위 설명자료 활용) 판례 분석 및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설명자료 최종 검토 및 활용 방안 모색 ■ (통계 발표시기 개선 추진) '25년 3분기 중 '24년도 조직현황 대외발표가 가능하도록 행정관청별 노조 적극 관리 및 조사·분석기간 단축 추진
II-1-①	■ (평가대상 확대) 신설·변경되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강화, 기존·신규 사업 중 평가대상 편입 검토	■ 국회예정처의 '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추가 편입 가능사업으로 지적한 사업(11개)은 사전협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
II-1-②	■ 빈일자리 해소 및 이중구조 개선 지원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사업 인지도 및 체감 성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확산 등 홍보 필요	■ 일자리사업 체감도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공적인 중앙-지방간 일자리 협업 성공모델 확산(5개→10개)
II-1-③	■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 수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 반영 여부 지속 모니터링

II-1-④	■ 숙련된 외국인력,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장기근속 특례 신설,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II-2-①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가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필요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가입누락자 발굴) 국세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지속 발굴 및 미가입자 직권가입 추진
II-2-②	■ 반복수급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 지속	▪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속히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기준 단계적 강화
II-3-①	■ 참여자의 복합애로 해소와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 필요	▪ 고용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편 검토 * '24년 민간위탁기관 성과지표는 성과중심 평가체계로 기 개편
II-3-②	■ 맞춤형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성과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 신규 구축('25년)과 함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및 소통강화 노력 병행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성과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정량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25년 상반기 적용)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속 보완
II-4-①	■ 고용24 정식 운영 이후 시스템은 안정적이나,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필요	▪ 고용24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 고용24 메인화면 구성, 검색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II-4-②	■ 위기업종 중심 현장 기반의 데이터 수집 체계화 및 이슈 분석	▪ '25년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추진 예정, 아울러 모니터링 체계 효율화 및 시스템 구축 추진
II-4-③	■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미제공 중, 향후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추진 및 공표범위 확대 후속 조치로 '11년~'22년 자료 추가 소급 공표

II-4-④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저조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여전	■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면서 특히 일·육아 병행 지원 확대 - (일·육아 병행)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시 사업주 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재택근무 활용 사업주 지원요건을 완화해 주 1회(현재는 월6회) 재택근무도 장려금 지원
III-1-①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이후 최종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경험 등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연계 및 체계적 이력 관리에 한계 ■ (청년 일경험) 경력 채용 경향 심화 및 일경험 직무 등의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25년 일경험 지원규모 확대 등 필요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등 참여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관리 방안 마련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을 지속·강화해 지원규모를 확대[1]하고 다양한 청년 수요[2]·특성[3]을 고려하여 일경험 기회 제공 추진
III-1-②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이 더 많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 밀착 지원하도록 체계적 발굴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운영주체) 참여 확대 필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난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강구 필요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모집,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채용장려금+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추진
III-1-③	■ 채용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모니터링이 담당 부서별로 운영 → 체계적인 지도·감독 필요 ■ 공정채용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인사·노무 관련 추가적 컨설팅 수요가 많은 편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원 필요	■ 채용 관련 모니터링 통합 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도·감독 추진 * 관련 부서 협의(~'24.12월) → 운영기관 모집·선정('25.1~2월) → 모니터링 운영, 지도·감독 연계(~12월) ■ 부처 내 컨설팅 사업 통합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컨설팅 제공 * 공정채용 컨설팅 기업 대상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 등 8개분야 컨설팅 추가 제공

III-2-①	■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제2의 주된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 중이나, 일방적·단편적으로 추진	■ [40⁺] 전 국민 생애전환 경력(재)설계 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 재직·구직자 등 내일배움카드 과정 개설 및 비용 지원, 대기업 재직·퇴직예정자 현 직장에서 경력설계, 전환배치 교육 등 지원 ■ [50⁺] 중장년 재취업 종합서비스 제공 – 중장년의 특성과 선호 일자리를 분석·파악하여 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 등의 일자리 서비스로 유형화 – 유망자격 및 경력전환·이음형 일자리 발굴, 훈련 및 일경험, 재취업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60⁺]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토대로 계속고용 제도화 추진, 기업의 계속고용 부담 완화되도록 고령자 대상 지원금 제도 확대·개편
III-2-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이나, 중소기업과 남성은 여전히 제도 활용 저조	■ 부모 맞돌봄 확산,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 방식 폐지 등 소득지원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사용기간 등 제도를 확대하고('25.2.23~),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 ■ 제도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III-2-③	■ 여성고용률은 역대 최고치 기록, 성별 임금격차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OECD 주요국 대비 미흡	■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 지속 – '25년 감독계획 수립·협조 – '25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시 ■ 소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나 법규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사용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평등 상담 및 홍보 강화

III-3-①	■ 대기업, 일부 부처(교육청, 국방부, 교육부) 공무원 부문 고용저조 지속 ■ 발달장애 증가,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미흡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컨설팅 확대, 명단공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훈련센터 지속 확충('25년 3개소)
III-3-②	■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단계별·맞춤형 성장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한 지역의 스타상품 발굴·확산 등 판로지원 강화
IV-1-①	■ '24년 신규 추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모니터링 지속 필요	■ 프로젝트 중심 훈련 강화, 기업 현직자 멘토의 훈련참여 확대 등 훈련의 현장성 향상 추진
IV-1-②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경우, 성격이 다른 운영기관(지역인자위, 산업인자위)이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과정 심사·공급 → 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장점을 살릴수 있도록 차별화할 필요	■ 운영기관별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훈련공급 체계를 정비
IV-2-①	■ 제조업 불황과 투자 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 2년 연속 훈련규모 역대 최대 확대에 따른 청년 하이테크과정 훈련생 관리 난이도 상승	■ 청년 하이테크과정은 지나친 물량 확대보다는 우량기업체 협약반 운영 등으로 고수준의 훈련품질을 유지하고 취업지원 강화
IV-2-②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의 훈련인식 부족을 고려할 때, 훈련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훈련성과 등 확산 필요 ■ (기업직업훈련카드) 50인 미만 기업 뿐만 아니라 훈련 이력이 없는 기업이 훈련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 발굴 필요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지역단위 HR 리더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 중소기업(98개소)을 선정하여 전국·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공유 세미나 등을 운영 ⇒ 내년도 지속 확산 추진 ■ (기업직업훈련카드) 3년 이내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에게 기업직업훈련카드 우선 발급(우선순위 기준 마련)
IV-3-①	■ 올해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 인기종목 신설, 전산 연계, 교육청 의견수렴 등 유의미한 성과 → 자격-교육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협업체계 지속	■ 직무능력은행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성·통용성이 높은 사업주 자격 및 공인 민간자격, 청년 해외 일경험·교육정보 등 연계정보 지속 확대('25) ■ 교육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업 체계 지속·강화

Ⅳ-3-②	■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8개 → 2개)이 형식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인 내실화 필요	■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생훈련 확대 및 유형 통합 시너지 제고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 신규 선정('24. 25개 → '25. 30개소)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선정 추진('24. 100개 → '25. 100개+α 프로그램) – 다수 유형 운영기관에 대한 통합 지원금 지원 기준, 성과평가 우대 방안 마련을 통해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 극대화
Ⅴ-1-①	■ 고위험사업장의 컨설팅 사후점검 등 후속조치 필요	■ 컨설팅 후 사후관리 신설하여 위험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상태가 미흡한 사업장은 패트롤 등 점검 연계
Ⅴ-1-②	■ 전지산업 등 新산업 화학사고 예방 필요성 증대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대상 확대 – 新산업 및 노후 화학산단 사업장에 대해서도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실시('24년 2,000개소 → '25년 4,000개소)
Ⅴ-1-③	■ '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인지도 개선 및 협·단체의 참여도 제고 필요	■ 협회·단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신문광고,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한 협회·단체 인지도 향상
Ⅴ-2-①	■ 사고 후 동종 업종·유형 재해 예방 위해 기획감독 등을 추진 중, 평상시 위험징후 파악, 상황 공유 및 예방조치 등 선제적 관리 강화 必	■ 지역별·월별 재해 현황 분석 등을 통해 ❶선제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❷자율개선 권고, ❸점검·감독 등 단계적 조치하는 체계 마련
Ⅴ-2-②	■ (안전멘토링) 중점 멘토링 대상 고위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 분야(14개)도 작업 내용, 재해 특성에 맞는 안전자료 개발·제공 필요 ■ (추락재해 예방 감독) 추락재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독과 함께 안전시설 설치·구매 재정지원 등 자율개선 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 (안전멘토링) 전문건설업 종류(17개)별 안전관리 자료 지속 개발·제공 ■ (추락재해 예방 감독) 그간의 감독,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추락재해 예방시설(고소작업대 등) 재정지원 추진

V-2-③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속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역량 개선 노력 필요	■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 개편('25년~), 수사지침서, 형사절차 포켓북 배포 등 자료 배포('24.11월) 등 감독관 역량 강화 노력 지속
V-3-①	■ 표준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된 기술표준·기술지원규정 공표 추진	■ 현장건의 등으로 추가된 규제개선 사항 개정 지속 추진 ■ 기술표준·기술지원규정 표준위 본위원회 최종 심의 후 공표('25.1월2주)
V-3-②	■ (기술지원 사업)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위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실시 필요 ■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사업 활성화 필요	■ (기술지원 사업) 설립 1년 이내 신규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업종 등 사업장 선정 기준 마련 ■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대기업(원청)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경로 다양화, 간담회 등 홍보 방안 마련
V-3-③	■ 지원 품목의 다양화, 자율신청제도 신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 계속	■ 부처 협업 및 자체 발굴로 신규 지원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자율신청 제도의 상시 운영 등 운영 개선 추진(계속)
V-4-①	■ (건강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안심센터) 지속적으로 협력병원·협력기관 발굴 필요	■ (건강센터)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인프라의 현장성 강화 ■ (안심센터) 질병 보고·통계 전산망을 고도화하여 사용자 중심 시스템 운영
V-4-②	■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이행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직업병 취약 사업장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 평가, 화학물질 노출수준 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적극 연계 필요	■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컨설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미이행 사업장 발굴 및 안내 강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 제공 ■ (직업병 취약 사업장 컨설팅) 컨설팅 사례, 지역별 산업분포* 및 업종별 이슈를 반영한 '보건관리 가이드' 마련(7종)

V-4-③	■ (산재보상 제도개선) 노·사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 (신속 처리) 업무상 질병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여전히 처리 기간이 약 230일 이상 소요('24.10월) ■ (직업복귀율 제고) 원직 복귀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타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산재보상 제도개선) 제도개선안 마련 및 노사협의('25.上) ■ (신속 처리) 처리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의 민간위탁 물량·기관 지속 확대 및 담당 조사인력 증원 노력(연중) ■ (직업복귀율 제고) 재해자의 원직 복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및 타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25.下)
V-5-①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25년 안실단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
V-5-②	■ '24년 신규로 포럼 구성·운영을 추진하였는데, 25년에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 발굴에 더 노력할 필요	■ 포럼 참여자 의견 수렴, 지역 협단체 협조 등을 토대로 지역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포럼 운영계획 수립·시행
V-5-③	■ 4개 안전체험교육장(제천, 담양, 여수, 익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 ■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실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	■ '25년에는 중부(인천 부평구) 안전체험교육장을 개관하고, 경북지역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 건립 추진(기재부 협의) ■ '25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예산(2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자료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 대폭 확대 실시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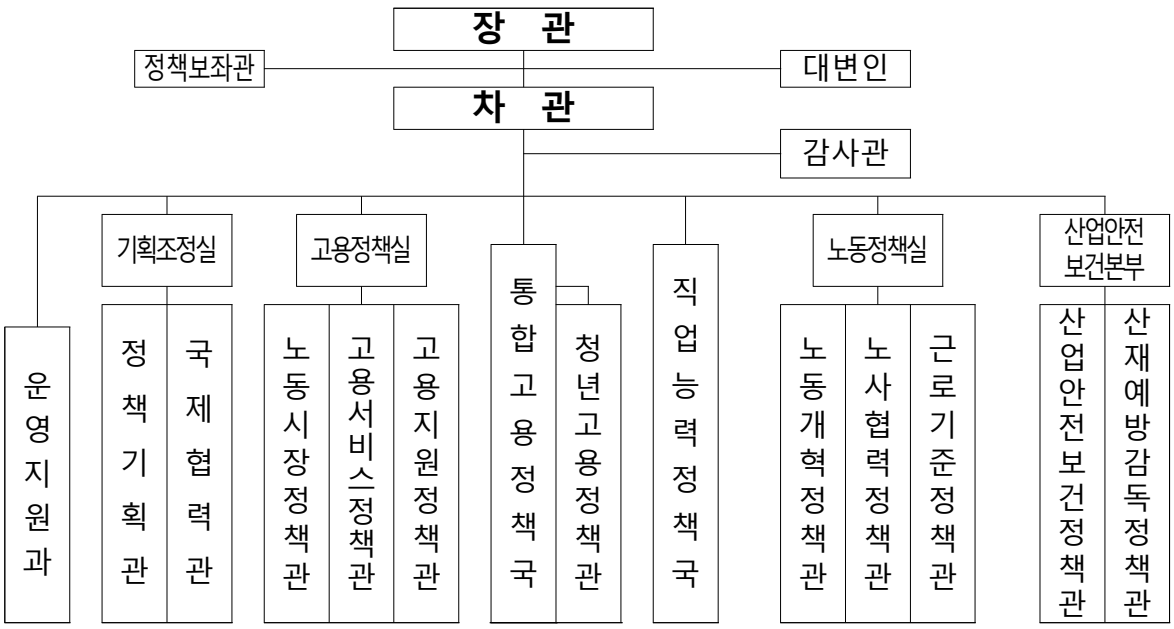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사람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 기능 수행

□ 핵심기능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취약계층, 지역·산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및 고용서비스 제공** ▷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노동자 권익 보호	▷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비정규직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노동존중, 노사상생의 문화 확산**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 ▷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 건강 증진** ▷ **산재노동자 보상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 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
비 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전략목표	**I.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II.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와 고용서비스·안전망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IV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한다.**	**V. 현장중심의 산업안전보건행정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성과목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한다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한다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춰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및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가 없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감독·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견인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확충한다	산재예방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직업병 예방과 산재보상 체계를 고도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내면화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지표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율**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사업장감독을 통한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 조사방법 :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 데이터 추출
- 측정산식 : 사업장감독 법 위반 개선 사업장 수 / 사업장 감독 법 위반 사업장 수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4,749개소 중 23,297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개선율은 **94.1%를 달성**하였습니다.

구분	'20	'21	'22	'23	'24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율(%)	84.0	89.3	96.6	95.9	94.1

□ 성과분석

○ 최근 경기 악화와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 등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강력한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 2024년 10월 22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는 '상습 체불 근절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전년동기 대비 28.8%(1,040건 → 1,339건) 증가하고, 임금체불 기소건수 48.4%(23,101건 → 34,278건) 증가('24.12월)했습니다.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획감독과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체불 신고가 어려운 재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익명 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을 시행했으며, 전국 동시 특별감독을 통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도 강화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법 위반사항을 8.8만 건 적발하고, 위반사항 사법처리 건수도 증가(583건→745건)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빠른 문제 해결 노력으로 지도해결률은 지속적으로 증가(63.0% → 65.0%)하였고, 청산액도 18.3% 증가했습니다.(14,112 → 16,697억원)

○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으로 2만 개 사업장의 10만 명 근로자에게 5,534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생계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 노동질서(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점검(17,919개소)을 실시하고,

- 20인 미만의 신규 사업장 및 특정 업종(건설업, 병원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점검(7,691개소)과 근로시간 및 괴롭힘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400개소)을 제공하여 근로 조건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하겠습니다.

○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하겠습니다.

2.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와 고용서비스·안전망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 조사방법 : 고용보험전산망
- 측정산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60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1,497만명('21) → 1,549만명('22') →1,583만명('23) → 1,606만명('24)

□ 성과분석

○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고용부·기재부 합동)를 운영하여 사회이동성 개선, 건설업 일자리 지원, 청년 고용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실질적인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4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가입을 지원하였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입자가 11.2% 증가했습니다.

* (2022년 12월 78.6만 명 → 2023년 12월 84만 명 → 2024년 12월 87.4만 명)

- 대규모 신고 누락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택배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9만 명의 누락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채용 정보 제공, 알선,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실업 인정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98,075건을 파악하여 적정 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과 상담 기회 확대에 힘입어 구직급여를 끝까지 수급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2년 연속 30% 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 재취업률(%): ('18) 28.9 → ('19) 25.8 → ('22) 28.0 → ('23) 30.3 → ('24) 30.6

- 고령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한 결과, 2024년 기준 8,283명이 재취업수당을 수급하여 전년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 조기재취업 요건 완화(12개월→6개월) 및 선지급방식 도입

○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위, 복지부, 중기부 등 부처간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복합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협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총 31.8만명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2024년에는 기업·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통해 4,290명의 구직자가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경험하였고, 1,424개 기업이 근로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3,46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기업 참여자의 만족도도 상승했습니다.

  * 구직자/기업: '23년 4.64점 / 4.44점 → '24년 4.77점<+0.13> / 4.48점<+0.04>

□ 향후 추진계획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조세·사회보험 신고사무 지원을 위해 “보수원클릭서비스” 보급을 확산하겠습니다.

○ 국세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지속 발굴하고, 미가입자 직권가입 추진하겠습니다.

3.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청년고용률

□ 성과지표 개요

〈 청년고용률 〉

- 개념 : 15~29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방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측정산식 : (취업자 ÷ 15~29세 인구) × 100

□ '24년 측정결과

○ '24년 청년고용률은 46.1%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호

* 청년 고용률(%): ('20) 42.2 ('21) 44.2 ('22) 46.6 ('23) 46.5 ('24) 46.1
** 20대 후반 고용률(%): ('20) 67.6 ('21) 68.5 ('22) 71.4 ('23) 72.3 ('24) 72.5

□ 성과분석

○ 청년들이 조기에 커리어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재학 시기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3개소로 확대되어 2024년 11월 기준 16.2만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 수시 및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는 고용시장 환경에 맞춰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5,172개 기업에서 4.9만명이 일경험을 제공받아 참여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 직무 탐색, 기업 이해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만족도 88.6점), 기업 또한 우수 인재 확보 및 기업 인식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4년 9,812명이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아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했습니다.(2021년 55.1%에서 2023년 68.6%로 증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기업 3.6만 개소에서 장기 실업자, 고졸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 총 90,862명을 채용했습니다.

- 사업 활용도·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학습병행 수료 청년과의 연계,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중소기업 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사각지대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층의 초기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2024년 5월말 목표 인원 24,800명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기존 8개)하여 미취업 청년을 발굴(5만 명)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5.8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고, 관계부처(과기·교육·복지부 등)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도 지원(4.5만 명)할 예정입니다.

○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2년간),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과지표	장년고용률

□ 성과지표 개요

〈 장년고용률 〉

- 개념 : 50~69세의 고용률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방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측정산식 : (50~69세 취업자 ÷ 50~69세 인구) × 100

□ '24년 측정결과

○ 고령자(50세~69세) 고용률은 '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4년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 역대 2위('23년 68.7%로 역대 1위)로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이고, 취업자 수는 지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50~69세 고용률, %) ('21년) 66.4 → ('22년) 68.1 → ('23년) 68.7 → ('24년) 68.6
* (50~69세 취업자 수, 천명) ('21년)10,262 → ('22년)10,758 → ('23년)11,052 → ('24년)11,214

□ 성과분석

○ 40대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2024년에는 각각 56,102명(+11.7%)과 24,328명(+189.2%)이 참여했습니다.

- 40대 이상 재직자가 스스로 이·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24.11월)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0대 재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지역·기업별 채용 수요를 기반으로 중장년 맞춤직무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중장년내일센터를 4개소 추가 지정(31개소 → 35개소)하고, 고용

센터 내 중장년 전담 창구를 13개소 추가(48개소 → 61개소)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컨설턴트 인력을 47명 추가 배치(275명 → 322명)하여 심층 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집중 취업지원까지 연계하는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24.6월)하여 실태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개편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63세)에 맞춰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 훈련, 직무경험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으로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성과지표	여성고용률

□ 성과지표 개요

〈 여성고용률 〉

- 개념 : 15~64세 여성의 고용률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방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측정산식 : (여성 취업자 ÷ 여성 15~64세 인구) × 100

□ '24년 측정결과

○ 여성 고용률(15~64세)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하여 62.1%를 달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도 전년 대비 13만 3천명 감소하여 121만 5천명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여성고용률 추이: ('20) 56.7% → ('21) 57.7% → ('22) 60.0% → ('23) 61.4%

□ 성과분석

○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지원 3법(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2024년 10월 개정했습니다.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이 2024년 2조 4,968억 원에서 2025년 4조 225억 원으로 61.1% 증가하며, 출산 육아기 장려금 예산도 같은 기간 1,806억 원에서 3,366억 원으로 86.4%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 아울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지급되는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지원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이와 함께,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업홍보도 전개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 급여 인상('25.1.1~), 육아휴직 기간연장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5.2.23~)에 따라 일하는 부모가 생애주기별 일·육아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 국민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지원 확대 개편사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육아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4.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경제활동 인구 중 직업훈련 참여 비중(%)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경제활동 인구 중 직업훈련의 참여 비중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 조사방법 : 고용정보통합 분석시스템
- 측정산식 : 직업훈련 참여인원/경제활동인구×100

□ '24년 측정결과

○ 첨단산업·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훈련과정(896개)을 충분히 확보하여 3.8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 '24년 76개 선도기업(112개 과정). 20개 대학(26개 과정) 신규 선정

○ '24년 직무능력은행 회원가입자 수가 62,965명으로 '24년 목표치인 5만명 대비 2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23.12월) 11,282명 → ('24.6월) 20,851명 → ('24.12월) 62,965명

- 다만, 전체 훈련인원은 '23년 대비 다소 감소하여 '24년 경제활동 인구 중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10.7%입니다.

□ 성과분석

○ 첨단분야 인프라 등을 갖춘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 현장의 훈련수요에 맞춰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 외 첨단·융복합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신기술 역량 향상을 지원했습니다.

- KDT 훈련과정은 높은 취업성과를 보이며, 기존의 디지털 훈련과 비교해 월평균 임금과 대기업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도체 학과 10개, AI·저탄소 학과 각 5개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 15개를 첨단기술 융합 과정으로 개편 등을 토대로 청년 하이테크 과정 훈련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주요 기업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및 기업 견학, 현장실습을 지원했습니다.

○ 취업성과가 좋은 적합직종을 발굴하여 중장년·여성 대상 특화훈련을 2024년 2,550명으로 확대하여 양호한 취업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과 공동 직업체험 주간과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를 활용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과 취업 기회를 연계했습니다.

○ 중소기업 맞춤훈련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전담 주치의를 234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AI 기반 기업맞춤 훈련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4,12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이 중 9,402개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기업별 여건 진단 및 문제해결식 훈련과정 개발까지 종합지원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하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 S-OJT 참여기업 전년 대비 85.8% 증가('23. 1,332개 → '24. 2,475개소)

-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50인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확대하여 2024년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 직무능력은행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직무능력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과 100개의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훈련센터를 2024년 25개로 확대하여 산업 전환 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했고, 지방 근로자들의 직무 전환 훈련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프로젝트 중심 훈련 강화, 기업 현직자 멘토의 훈련참여 확대** 등 **훈련의 현장성 향상** 추진

○ 청년 하이테크과정은 지나친 물량 확대보다는 **우량기업체 협약반** 운영 등으로 **고수준의 훈련품질을 유지**하고 **취업지원 강화**

5. 산업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성과지표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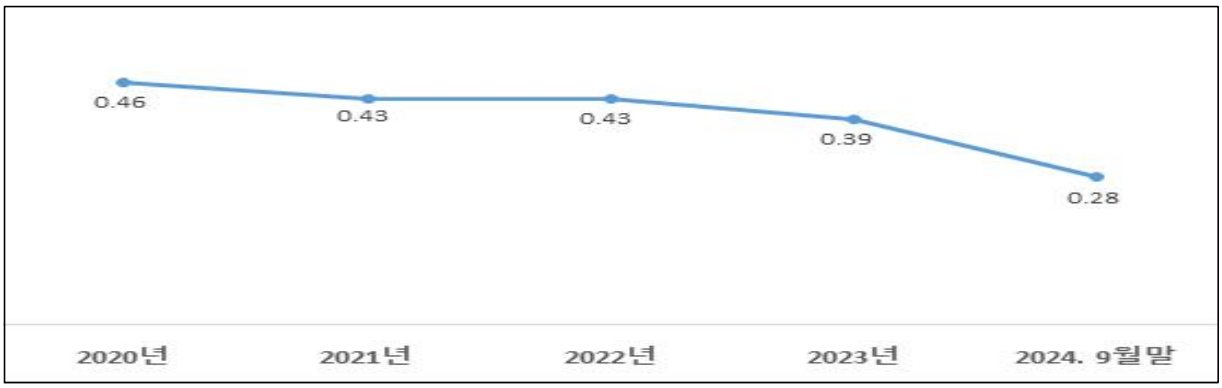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근로자 10,000명 중 사고사망자 비율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조사방법 : 유족급여 통계
- 측정산식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 10,000

□ '24년 측정결과

○ '24.9월말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0.28‰로 전년 동기와 같음



□ 성과분석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16명 감소(459명→443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2.65만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10인 미만 소기업 22만 개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6.7%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 2,669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029개 사업장(3,220억 원)의 위험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228개 대기업과 3,207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재해예방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9,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위험이 예상되는 1,620개 사업장(전년 대비 800% 증가)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2,5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멘토링을 진행하고, 추락재해 고위험 현장 2,650개소를 대상으로 추락 예방 집중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화학업종에서는 88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PSM(공정안전관리) 매칭 컨설팅을 496회 진행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특히, 화성 화재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기업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전지제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여 확산했습니다.

○ 산업안전 규제는 합리화하고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확대·운영했습니다.

- 또한,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단위 '안전보건 포럼'을 새롭게 운영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표지 부착(5,291개소), △'마이 세이프티 룰' 제정(868개소), △'안전에 스며들기' 캠페인(496회) 등 3대 안전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 법 개정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으며('25년 6월 1일 시행),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보령에 근로자건강

센터 1개소를 신설하고, 부산과 원주 등 9개 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했습니다.

- 또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신규 추진(4월~)하고, 산림치유 심리지원 MOU를 체결(2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 복귀율은 2023년 70.6%에서 2024년 11월 72.2%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제공 등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배달종사자에 대한 자율 산재에방 활동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신설 등 산업안전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대한 지원,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활용·지원하여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겠습니다.